

統一

이렇게 생각한다



國土統一院

目 次

제 1 부 論說 및 時論

南北문제에 「上智」를 모으자	李温竹	9
이 답답한 民族史의 고통	柳根一	13
기성세대여, 변화를 두려워 말자	姜萬吉	17
民族통일의 전제條件	李長熙	20
어떤 統一을 원하는가	朴世逸	24
「先民主 後統一」을 생각할 때	鄭鍾文	28
統一認識의 單純化를 넘어서	李洪九	32
分斷의 책임, 통일의 責任	李鍾興	36
南北 「對決관계」를 「協力」으로 전환시켜야	金學俊	40

統一운동의 조건	劉載天	44
統一論부터 統一할 때	金容述	48
모든 統一주장이 善인가	李相禹	52
작은 것부터	安明基	57
「단계적 統一論」국민적 合意 확인	金學俊	61
「이젠 北側이 대답할 차례」	韓昇助	65
「反統一 세력」이란 말	南時旭	70
南北韓 통일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尹泳五	74
盲目的 통일론보다 民主化가 우선	安秉永	82

제 2부 社 說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明暗	國民日報 (9. 11)	93
「통일민주공화국」방안	東亞日報 (9. 11)	96
새 統一방안의 現實性	京鄉新聞 (9. 12)	99
統一로 가는 한민족공동체	서울신문 (9. 12)	102
轉換시대의 새 統一方案	世界日報 (9. 12)	106
「한민족 공동체」	朝鮮日報 (9. 12)	109
새 「統一方案」의 前提	中央日報 (9. 12)	112
統一에 이르는 段階들	한국일보 (9. 12)	115
새 「통일방안」을 국민적 토론에 부치자	한겨레신문 (9. 13)	118

제 1부 論說 및 時論

南北문제에 「上智」를 모으자

서울신문 「時論」 '89.2.11 李温竹 서울대 교수

「미연에 밝게 보고 변란이 일기 전에 제어하고 다스리며 위태로움이 있기에 앞서 나라를 보전하는 것은 上智라 할 것이요, 이미 일어난 뒤에 깨달아 변란임을 알고 다스려 도모하며 위험을 알아 안정을 시도함은 中智라 할 것이며, 무릇 위난을 보고도 다스릴 생각이나 안정을 구하고자 힘이 없다면 이는 下智라 할 것입니다」 이는 栗谷先生께서 危亂이 다가오는 기미를 알아차리시고 임금을 일깨우고자 올린 상소문에 적힌 글귀이다.

우리의 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정치 지도자들의 지혜가 上智에 미치지 못하고 中智조차 갖지 못하여 나라가 송두리째 남의 손에 넘어가는 비극을 겪는가 하면 끝내는 국토가 반쪽이 나버리고도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변을 당하는 아픈 경험을 뒤로 하고 있다. 그러기에 더욱 이 말씀이 절실히 와 닿는다.

지난 몇 해 사이의 혼란을 겪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舊韓末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형세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고, 그 위기를 모면한 오늘의 상황을 또 광복후의 난맥상에 비겨 우려를 표명하는 이도 있었다. 더구나 남북관계의 변화(?)가 급박하게 진전하는 와중에서 6·25의 전야를 상기시키는 소리마저 들린다.

그러나 이미 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요즈음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어떤 낙관적인 실마리를 보여주는 듯한 희망마저 안게 해 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관계라는 것이 원래 예외없이 상대방이 있는 상호적인 것이어서 정작 그 상대방의 기본적인 자세나 행위유형에 이 쪽이 보여주는 만큼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일게 하는 소지가 있다면 마땅히 다시한번 과연 우리가 남북관계의 앞날을 제대로 짚고 필요한 上智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냉철히 省察하고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지금에 와서 전쟁 발발시의 지도자중 생존해 있는 한 쪽 지도자에게 굳이 그 책임을 따지고 묻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다시 동란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보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는 스스로 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코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민족분단의 뼈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통일의 염원을 이룩해 보고자 하는 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뜻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도 그 「통일」이란 것이 그렇게 수월하게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예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러한 길을 닦아 나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안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남한에서만 양보하고 개방하고 교류에 적극성을 띤다고 일이 제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지도체제가 일종의 유

일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이 집중되어 있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우선 바로 보아야겠고 갑작스러운 개방과 남북교류로 말미암아 그 체제에 일정한 도전이 온다고 할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라는 점도 정확히 예측해 뒤야 한다.

또한 북한이 여느 공산권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틀림 없고 그 타개를 위해서는 남한과 손을 잡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얽힌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지도체제의 반응 역시 예측을 제대로 잘 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결국 우리가 上智를 발휘해야 할 점은 소극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예상되는 위험성에 관해서이다.

변란의 개연성을 그대로 안은 채 관계개선이나 상호교류·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한 모험이다. 따라서 우리가 긴 안목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영구화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없애고 북한을 바로 인식함으로써 민족 공동체적 自我를 구축하고자 하는 뜻도 이를 바탕으로 한 화해의 정신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일방적인 양보나 교류추진에 主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러한 화해의 정신에 입각하여 경제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남북이 서로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요, 이산가족의 恨도 풀어보려 함이요, 관광·문화·학술·체육 등 각 방면의 인적교류를 촉진시켜 서서히 자연스럽게 민족공동체적 자아정체감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야 비로소 우리는 통일된 민족으로서 다가오는 아시아의 세기에 펼쳐질 새로운 문명의 전개에 보다 큰 역량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아 우리의 젊은 지성들도 21세기의 주역으로서의 준비에 보다 만전을 다하여 열중할 것이며 앞날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下智에 눈이 가려 모처럼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호기에 일을 크게
그르치는데 한 몫 하지 않도록 理性的으로 성찰할 것이다. 오늘과 같은 전
환기에 우리 모두에게 모든 部面에서 上智가 절실하지만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더 더욱 그러하다.

이 답답한 民族史의 고통

朝鮮日報 「칼럼」 '89.4.2 柳根一 논설위원

갈등구조의 代물림

統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고통스럽기 그지 없는 말이다. 통일이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구한 일들이 벌어져 왔던가. 자유당 말기의 進歩黨의 「평화통일」선언, 제2공화국 하의 학생들과 혁신 정당들의 폭발적인 통일논의, 그리고 70년대의 남·북 공동선언과 오늘의 정부·재야의 통일갈등 등, 실로 통일이라는 말이 빚어 낸 그 술한 환희와 고통의 사연들을 헤아리자면 머리가 하얗게 쉰 지경이다.

더욱 비극적인 일은, 그동안 30년의 세월이 흘러가서 뽕밭이 바다로 변할 만큼 세상은 크게 변했는데도, 유독 그 통일을 둘러싼 갈등구조만은 그 때나 지금이나 단 한치도 앞으로 나간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때도 정부 당국의 「통일정책」과 정부 밖의 「통일주장」이 서로 맞부딪치며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 破局이 닥치고 많은 사람들이 기구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이런 갈등구조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끝없이 되풀이 되는 갈등구조를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물려주려 하고 있다. 비극적인 역사의 단순 재생산인 것이다.

분단이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었는데, 이쯤되면 이제는 통일논의의 갈등구조도 우리를 아프게하는 또 하나의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분단 때문에 아픈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 통일논의의 갈등까지도 또 하나의 고통을 더해줄 뿐이라면, 이거야말로 무엇을 위한 통일논의인지 종잡을 수가 없게 된다.

이러다가는 통일은 고사하고 통일의 문턱에도 이르기 전에 그 통일논의의 싸움 때문에 사람이 지쳐 자빠질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건 야당들이건 재야건 학생이건, 통일을 이룩하기 전에 우선 통일논의의 통일부터 이룩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은 그럴듯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反통일 세력」하고 어떻게 통일을 이야기할 것이냐, 「체제 전복 세력」하고 어떻게 통일을 이야기할 것이냐, 우리 黨을 욕하는 저쪽 黨 사람들과는 통일을 이야기 할 수 없다... 하는 식의 싸움이 또 벌어질 법도 하다.

내부 統一이 급하다

그러나, 그렇다면 도대체 통일은 누구하고 어떻게 이룩하겠다는 것인가. 정히 그렇다면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말고 아예 討伐이나 征伐이라는 말을 쓰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이 征伐의 개념에 가장 투철한 것이 바로 北의 「남조선 해방」論이요, 자유당 때의 北進統一論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

리가 바라는 통일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어서는 안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의 통일논의 역시 누가 누구를 배제하고 타도하고 억누르고 무시하는 식의 싸움의 논리들로 百家爭鳴을 이룬다면 그것은 남북통일은 커녕 南쪽을 다시 여러갈래와 조각으로 더 분단하는 꼴 밖엔 안 되는 것이다. 통일을 하자고 통일논의를 하는 것인데, 통일논의를 하다가 거꾸로 분쟁과 상극을 더욱 격화시킨다면 그것처럼 우스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 내부에서나마 통일논의를 통일할 궁리부터 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統一을 정치武器化해선 안된다는 점에 합의하는 것이다. 정부는 「통일정책」이나 「북방정책」의 독점적인 카드를 가지고서 內政의 해계모니를 잡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 박 정희씨 처럼 통일을 維新의 호도책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항세력도 통일을 그 어떤 「투쟁의 최고형태」로 무기화하지 않았으면 한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金泳三총재도 말했듯이 자유와 민주와 人權이 보장되는 통일만을 유일하게 「좋은 통일」로 간주하자는데 합의할 일이다. 결코 「모든 통일은 善」일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詩的 표현일지는 몰라도, 정말로 그렇다면 維新체제로 남북을 통일한다해도 그것을 善이라고 부르겠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을진대는 우리는 우리나라의 끊임없는 민주화·인간화와 함께, 北쪽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人權의 억압과 民主의 함몰에도 동시적인 항의를 발해야 한다.

말만 앞세우지 말자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과잉된 管理의 억압이 있었으며, 그런 억압으로 국민은 고통을 받았다. ... 개인숭배 시대에 나타

난 사상의 독점화가 가져온 폐해를 일소하기 위한 사회와 사상의 경직화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페레스트로이카가 北에서도 일어나야 한다고 소리 높여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남·북한의 민주화이며 全 韓半島의 민주화를 동반하는 통일만을 유일하게 옹호한 통일이라고 말해야 한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통일논의의 통일을 이룩해내기 위한 민주적 절차의 稼動이다. 국회도 있고 통일원도 있는데 왜 여태까지 통일논의들이 제각기 따로 놀고 저마다 독불장군인가. 말만 했다하면 『각계각층의 중지를 수렴하여…』어찌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衆智 수렴작업을 언제 어떻게 해 보았단 말인가. 최소한 院內 4黨의 통일 정책이라도 하나로 수렴해 보려고 피차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文목사가 돌아오면 또 한 차례 싸움이 벌어지겠지… 죽여라, 왜 죽이느냐. 잡아라, 왜 잡느냐.. 이래서 우리의 통일논의는 또 한번 非통일적인 갈등의 늪으로 깊이 빠져버릴 모양이다. 아, 이 답답한 민족사의 고통이여.

기성세대여, 변화를 두려워 말자

한겨레신문 「논단」 '89.6.1 姜萬吉 고려대 교수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두려워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나이가 좀 들고 가진 것도 다소 있고 또 어느 정도로 이른바 「사회적 지위」란 것을 갖춘 기성세대일수록 세상이 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일수록 이제 개인의 안정이나 안일만이 아닌 민족의 장래문제, 역사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책임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세상은 변하며, 젊은 세대의 생각이나 행동은 기성세대의 그것과 다르게 마련이다. 만약 20대의 생각이나 행동이 50대·60대의 그것과 같다면 그 민족사회의 앞날은 어찌 되겠는가. 제자리 걸음과 멸망이 있을 뿐이며 바로 우리가 그런 불행한 역사를 가진 적이 있는 민족이다.

이씨왕조 5백년 동안 지배권력과 기성세대는 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군주 전제주의가, 경제적으로 지주 소작제가, 사회적으로 양반 상놈의 차별이, 사상적으로 주자학의 절대주의가 영원무궁하기를 바랐고 그것에 변화를 주려는 세력은 철저히 제거했다. 그 결과 이씨왕조는 5백년이나 유지되었지만 우리 민족사회는 어찌되었는가?

같은 때 남들이 르네상스를, 시민혁명을, 산업혁명을, 명치유신을 일으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 우리는 옛날이나 다름없이 그대로 있다가 결국 그들의 식민지로, 종으로 되지 않았던가. 종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이 바쳐졌지만 옳은 해방이 되지 못하고 민족 분단으로 또다시 처참한 비극을 치르지 않았는가. 결코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불과 1백년 전부터의 일이다.

20세기 후반기 민족 분단의 비극 속에서 지금의 기성세대는 많은 것을 잃은 것이 사실이다. 부모형제를, 팔다리를, 재산을 잃었고 그 젊음을 잃었다. 이 희생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으며 이 상처는 쉽게 가지지 않을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 이 상처와 희생을 제것처럼 생각하고 영원히 차지 말기를 바라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게 마련이며 변해야 한다. 기성세대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들의 분단시대, 그들의 20세기는 어쩔 수 없이 저물어가고 젊은 세대의 평화통일 시대가 될 21세기는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무엇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세상의 변화를 막을 수도 없지만 막아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기성세대가 아는 일이 중요하다. 입이 마르도록 한 말이지만, 우리 역사에서 식민지 시대가 잘못된 시대였던 것과 같이 분단시대도 잘못된 시대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민족사와 세계사의 흐름도 이제 무력통일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이 옳은 길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분단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북진통일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던 시대

에서 분단이 잘못되었고 평화통일밖에 방법이 없다는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이른바 「의식의 전환」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분단시대를 있게 하는 데 한몫을 다한 기성세대가 그것을 스스로 터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내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언제까지나 분단시대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고 그 변화에 따라가야 함을 아는 기성세대라 해도 너무 빠른 변화에는 두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변해야 할만큼 변하게 마련이며 변화가 너무 빠르다면 그것은 변해야 할만큼 변하지 않았을 때 오는 현상임을 아는 것이 순리이다.

기성세대여, 그대들의 과거의 회생을 민족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흔쾌히 잊어버리고,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 말고 그것에 함께하는 지혜와 용기를 갖자.

民族통일의 전제條件

國民日報 「국민時論」 '89. 7. 6 李長熙 외국어대 교수

최근 우리 대학 용인 캠퍼스 林秀卿양이 全大協대표로 평양축전에 참가하여 국내외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그리고 계속 보도되는 학생 운동권의 실체 또한 국민들을 크게 경악케 하고 있다. 이것들은 지금까지 진심으로 우리 사회의 내부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 진력해온 양심적인 민주세력들의 입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물론 우리 憲政史에서 학생운동이 민주화라는 정치발전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민주화와 통일이 현재 우리 사회의 발전 가치일진대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생운동이 통일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학생운동권의 성급하고 편향된 통일노력은 민족통일을 앞당기기는 커녕 남북간 不信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통일정책에 혼선과 역기능을 주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북한은 아직도 남조선 혁명론에 따른 무력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남한사회를 교란시켜 혁명역량이 충분히 성숙되면 남한을 무력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이다.

6·25가 강대국들의 대리전쟁이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해방이후 남한사회에서의 극심한 이념혼란이 북한을 오판케한데도 그 원인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4·19이후 학생운동의 역할이 남한사회에서 높이 평가되면서 북한은 남한의 학생운동을 남조선혁명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환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4·19직후에는 「연방제통일안」을 제의했고 1979년 10.26 직후에는 「남북 총리회담」을 제의하는 등 남한이 정치적 전환기에 처할 때마다 남한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한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해 왔다. 북한은 최근에도 남한 학생들의 순수한 민주화운동을 「남조선혁명」에 이용하여 남한사회에 불안을 조성시키고 있다.

이것은 지금 제6공화국 들어 싹트고 있는 민주화의 흐름을 역류시키고 있다. 노사분규 학생데모 등에 많은 경찰력이 투입되어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렸고, 시중에는 근거도 없는 황당무계한 유언비어가 떠돌아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남한사회의 혼란과 불안은 지금 북한을 남북대화에 성실하게 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조선 혁명론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 남북대화에는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東西獨의 경우는 지난 1월 15일의 빈 유럽 안보회의의 성과로 현재 베를린장벽의 철거까지 거론되는 등 통일의 가능성이 새롭게 모색되고 있다. 2차대전후 蘇聯이 제안했던 獨逸의 중립화 통일론이 독일국민의 구미를 다시 당기게 하고 있다. 이러한 동서독간 통일여건의 성숙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과 이 약속을 多者間 次元에서 국제적으로 보장해준 1975년

헬싱키 결의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이 條約을 바탕으로 활성화된 인적·물적 교류 확대는 상호의 안정된 국내 정치상황에서만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생각에서 동서독은 가능한 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

그 예로 西獨의 프랑케 內獨省장관은 東方政策으로 自由化물결이 스며들어 東獨體制內에 이탈조각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또 東獨이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은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공식성명을 발표, 東獨의 사회·정치적 안정에 적극 협조했다. 이에 동독도 종전의 강경책을 완화, 대화분위기 조성에 더욱 협조했다.

뿐만 아니라 西獨內에서도 모든 여·야 지도자들이 동방정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했고 여당인 社民黨은 1966년 이후 과격하고 진보적인 학생들의 주장의 일부를 제도권으로 적극 수렴, 혼란된 사회분위기를 진정시켜 동서독간에 대화를 위한 정치 및 사회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했다. 이와같이 분단국의 대화에는 상황의 안정이 긴요한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국회의원 재야인사 대학생들을 밀입북시키고 남한사회의 교란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남북한간 신뢰분위기 조성이나 남북대화에는 관심이 없고 아직도 남조선 혁명론의 망령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민족통일은 학생들의 성급하고 뜨거운 통일 열망만으로 간단히 이루어 지는게 아니다. 학생들이 자기들 政府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국민적 합의도 도외시한 채 철없이 통일문제를 들고 물의를 빚는 것은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노력에 기여하기 보다는 북한이 원하는 남한사회의 불안을 조성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남조선 혁명론에 의한 무력적 화통일에 동조하는 愚를 범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바로 이점을 직시,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우리사회의 민주적 내부개혁에 바탕을 둔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부터 해야한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북한을 대화창구로 이끌어 내 동서독과 같이 쌍방간 구속력 있는 제도화된 기본 바탕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일부 학자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한반도를 영구분단하려는 것이 아니다. 최근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따른 新 테타트 분위기에 힘입어 동서독이 재통일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남북한관계의 기본바탕을 우선적으로 정립하여 인적·물적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평화통일의 길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方法이다.

여기에는 정부와 여야 등 제도권의 노력도 절대 필요하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제도권에 흡수되지 못할 때 학생운동은 변혁운동의 선봉에 서게 되고 또 과격해진다.

이 점을 유의하여 제도권은 과감히 민주적 내부개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고 사회의 모든 압력 단체들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만이 재야와 학생들의 뜨거운 통일 열망을 제도권 속으로 잠재우고 나아가 北韓의 오판을 막고 北韓을 남북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어떤 統一을 원하는가

朝鮮日報 「아침論壇」 '89. 8. 4 朴世逸 서울대 교수

「善 통일」과 「惡 통일」

요즈음 국민은 불안하다. 물가상승, 수출둔화 등 우리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여 불안하고, 길거리 폐강도, 인신매매 등 법과 질서의 기강이 문란해져 불안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 못지 않게, 아니 실은 그 이상으로 오늘날 국민들을 불안하고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고와 이념의 혼란현상이다. 이런 혼란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文목사 林양 文신부의 입북 등 일련의 사태에서다.

사회적 존경을 받던 목사님, 正義를 외치던 신부님인데, 이 분들이 入北하여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또한 비방하는 어린학생을 보호한다고 올라가 함께 대한민국을 매도하고, 또 그러한 행위를 우리 정의구현사제단은

적극 지지한다고 나서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인즉 모두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도대체 이 분들은 어떤 통일을 원하고 있는가? 대단히 당혹스러운 일이다. 비록 사회의 일각에서 이지만, 사고의 혼란, 이념의 혼돈이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는가?

통일에는 본래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통일, 민족발전을 위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통일, 즉 惡統一이다. 이는 통일의 내용을 묻지않는 통일이다. 이는 남북의 일방이 자신들의 정치·경제체제를 絶對視하고 우상화하여, 다른 편에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폭력적 내용의 통일이라도 환영한다. 왜냐하면 統一 그 자체를 무조건 善으로 보기 때문에, 방법과 내용은 문제삼지 않는다. 소위 통일 지상주의자들의 통일론이 바로 이것이다.

文신부는 판문각에서 남쪽을 향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돌아갔던 미군을 이 땅에 다시 끌어들인 것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6·25라는 民族相殘의 비극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바로 모든 통일은 善이라고 주장하던 통일지상주의자, 惡통일론자들이 아닌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통일의 길이 있다. 바람직한 통일,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약속하는 통일, 곧 善統一이 그것이다. 이 통일노력은 南과 北이 자신들의 체제를 절대시하지 않고 相對化하는데서 출발한다. 자신들의 정치체제나 경제질서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南北 두 체제가 보다 民主化 人間化 自由化 開放化되는 과정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다.

인류는 과거 약 2백년 이상의 자본주의의 역사와 약 70년의 사회주의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인류는 양 체제의 장·단점을 익히 알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발전의 원동력은 개인의 자유와 創意에 있으나, 공동체적 연대나 윤리 없이는 진정한 사회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자유없

는 평등은 虛構이나, 평등없는 자유도 오래가지 못함을 알고 있다. 자유 시장 메커니즘의 강점도, 分配正義의 중요함도, 그리고 어느 체제에나 나타나는 권위적 관료주의의 병폐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自明해지는 것이 아닐까?

남북체제가 끊임없는 혁신과 自己修正을 통하여 보다 나은 체제로, 보다 높은 차원의 사회로 발전·수렴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善한 통일의 길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자주 주장되고 있는 냉전적 사고의 탈피란 바로 惡통일의 환상에서 벗어나 이러한 善통일을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자유체제의 우월성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統一이나 反統一이나의 二分法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민족이면 그 누가 통일을 바라지 않겠는가? 6·25를 일으킨 장본인들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다만 통일의 내용이 크게 다를 뿐이다. 최근의 사고와 이념의 혼란은 실은 바로 이 두가지 종류의 통일을 명백히 준별하지 않은데서 온다고 본다.

文목사 林양 文신부의 입북이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분명히 통일에 기여할지 모른다. 그러나 과연 어떤 통일에 기여할 것인가? 善통일인가? 惡통일인가?

그분들의 입북과 그 행적이 북한 당국자들에게 自己體制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주었는가? 북한사회의 민주화 개방화에 기여하였는가? 아니면 惡통일 환상만을 부채질하였는가? 아니 逆으로, 그분들의 입북과 對南 비방이 남한사회의 민주화 人間化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 남한의 지도자들에게 우리 체제에 대한 반성의 기회라도 제공하였는가? 답은 명백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 민족발전을 위한 善統一의 일꾼은 누구인가? 「自主化」는 경제성장없이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땀흘려 노력하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기업인, 「民主化」는 인권신장과 경제정의 실현 없이는 공허한 것이므로 이를 위해 노력하는 법조인 언론인 공무원, 「開放化」는 자기 실력을 높이지 않고는 종속의 위험이 있으므로, 부지런히 공부하는 학생 기술자 상공인, 그리고 또 우리사회의 「人間化」를 위해 노력하는 종교인 문화인 지식인, 각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 모두가 바로 善한 統一을 위한 진정한 일꾼들이 아니겠는가.

북한 사회에도 분명히 惡통일에 반대하고 善통일을 위해, 북한체제의 개방화 人間化 민주화에 노력하는 많은 동포들이 있다고 본다. 그들의 눈에 林양 文신부 등의 행적은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비칠 것인가?

이젠 깨어나야 한다

아니, 현재 우리사회의 危機의 본질은 한 두 성직자들의 입북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입북이 몰고 온 충격, 사고와 이념의 혼란이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컸다는 데 있다. 우리 사회의 체질이, 이념적 정신적 기반이 그만큼 허약해졌다는 데 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의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기회주의적 언동, 무원칙과 무정견이 국민들의 사고와 판단을 더욱 혼란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咸錫憲 선생께서 언젠가 말씀하셨다. “깨어있는 국민이어야 산다” 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할 때, 국민들이라도 깨어있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를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염원인 善한 統一도 반드시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先民主 後統一」을 생각할 때

東亞日報 「광화문」 '89.8.9 鄭鍾文 논설위원

유신독재 시절인 지난 70년대 초의 일이다. 反독재 운동을 벌이고 있던 在美 교포단체는 「先민주주의(先民) 後통일(後統)」을 내세운 韓民統과 「先통일 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韓民聯, 두세력의 연합을 시도했었다.

韓神大 출신들의 개신교 목사들이 주력이었던 韓民統은 反독재 투쟁의 목표가 韓國의 민주화 쟁취였음을 선명히 했고 崔德新 등의 韓民聯은 통일을 통한 독재제거를 그들의 행동 강령으로 삼았다. 그래서 韓民統은 韓民聯의 통일 우선 주장에 맞서기 위해 「先民 後統」을 강조했으나 韓民聯은 끝내 「先統 後民」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韓民聯은 「先統 後民」의 배경에 무서운 음모를 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통일을 달성하면 朴正熙독재가 없어질 수 있고 南韓의 독재체제가 종식되면 민주화의 장애요인인 反民主세력이 제거될 수 있다는 이

른바 反韓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南韓 정부 자체의 붕괴였고 그들의 논리는 통일과업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혁명의 흐름이었다.

「先統」의 함정

反政府 韓民統과 反韓의 韓民聯은 세인트루이스의 대 논쟁을 계기로 결국 결별하고 말았다. 그들의 결별은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先民 後統」과 「先統 後民」은 불과 기름처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겨놓았다. 「先統 後民」의 경우 「後民」은 선전포장에 불과했고 진실된 의도는 「先統」이었다. 집요하게 「先統」에 매달렸던 韓民聯은 그후 그들의 주류가 聯北 세력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그리고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이제는 異域이 아니라 한국 땅 본토에서 「先統」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역사의 反轉치고는 너무나 기이하다. 70년대초의 「先統」이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 노골화된 主思派의 통일 주장이나 그들의 「先統」시각에는 金日成主義의 통일관이 한 뿌리로 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얼마나 깊은 뿌리인가. 줄기차고 끈질기게 변함없는 뿌리. 그것이 바로 그들 「先統」주장의 기초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민주화 투쟁의 大長征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커졌다.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커진 양적 팽배. 우리 사회는 이 양적 팽배로 들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들뜸은 자본주의의 파행적인 발전과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先統」의 뿌리가 잘못된 정치의 비료를 먹고 착실하게 자라고 있는 숨겨진 현실에 무디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先統」의 뿌리를 가진 文益煥목사나 全大協대표 文奎鉉신부 등의 入北사건과 같은 이른바 公安政局의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했다.

하루를 내다보기 힘든 혼미정국 속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그것은

朴哲彦 청와대 전 특별보좌관의 對北 비밀접촉과 訪北說이다. 물론 朴正무 제1장관의 對北 비밀접촉은 「先統」 뿌리의 密入北사태와는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차원이 틀린 大韓民國 대통령의 밀사자격을 文목사 文신부 全大協대표 또는 徐敬元의원의 密入北과 동일선상에 놓으려는 발상은 그래서 설득력이 약하다.

그러나 「先統」의 함정을 고려할 때 그의 對北 비밀접촉 결과에 과연 얼마만큼의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정부의 對北비밀 통로 유지와 이 통로를 통한 비밀접촉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南北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발전의 일면으로 평가될 수 있다. 南北韓 비밀접촉 사실 노출에 놀라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그가 北측에 대해 무엇을 제기하고 그들과 무엇을 협상했느냐의 접촉내용이며 그같은 접촉은 어떠한 對北정책 원칙에 입각하고 있었느냐다. 바로 원칙의 문제다.

原則을 세워야

對北 비밀접촉의 원칙이 先 긴장완화나 先 통일협상이었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령 鄭周永 現代그룹 명예회장의 訪北같은 南北교류와 협력의 확대가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정착의 실현을 목표로 했을 경우와 分斷문제의 일괄타결 방안인 先통일을 이루기 위한 통일전략의 한 부분으로 간주됐을 경우, 그 방법론의 결과적인 차이는 현격해진다. 전자는 南北韓에 두개의 정부가 있다는 현실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후자는 조만간 없어져야할 「당국」의 존재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 버클리의 캘리포니아대학 스칼라피노 교수가 진단한 통일의 조건은 이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했다. 그는 첫째 긴장완화, 둘째 南北間 합의, 셋째 주변 4강의 이해가 통일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南北 비밀접촉의 내용은 쌍방간에 합의된 비밀원칙으로 인해 알길이 없다. 그러나 만일 비밀협상의 내용이 「先統」의 뿌리와 「先統」의 고등전략을 소홀히 한 소산이라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비밀접촉을 벌이면서 또 한편으로 平壤을 방문한 南韓의 「先統」신봉자들에게 고려연방제를 역설한 北韓의 二重的인 태도나 아직도 국민적인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우리의 통일방안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는 보도는 무엇을 뜻하겠는가.

이제 통일문제에 관한 접근 방법과 對北 협상에서 견지해야 할 우리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한다. 어느 때는 南北 정상회담을 말하고 어느 때는 교류와 협력을 제의하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통일방안을 협의하는 식의 협상방식은 아무래도 초점을 흐리게 하는 무원칙의 인상을 받게한다.

권력층 내부의 소수 엘리트 또는 개인에 의해 주도되는 密室外交는 지양되어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모든 외교가 그러하지만 특히 對北 관계에서는 先統 방법론 지향의 오해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떠한 시행착오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先統」노선을 반박 할 수 있었던 「先民 後統」의 논리와 왜 이들 두 세력이 결별 할 수 밖에 없었는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통일협상에 대비해서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입장은 긴장완화를 위한 南北間 합의의 도출이며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진정한 민주화를 통해 사회의 각종 갈등을 흡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같은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北韓의 先 민주화를 통일의 조건으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先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진정한 통일여건이 성숙될 것이다.

統一認識의 單純化를 넘어서

한국일보 「특별기고」 '89. 8. 10 李洪九 국토통일원장관

知友 金昌悅고문이 한국일보 사장직에서 벗어나 다시 筆苑으로 돌아온 후 「土曜世評」이란 칼럼을 맡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첫 칼럼은 바로 나에게 보내는 글이었다. 南北 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金고문의 글은 통일원장관에 대한 舊友의 忠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의문을 대변한 것이기에 이 기회에 통일논의와 연관된 狀況과 認識에 대한 나의 생각의 일단을 밝히고자 한다.

오늘날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의 생각과 논의가 쉽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상황은 복잡한데 인식은 오히려 단순화 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문제는 복잡해지는데 해답은 단순한 것을 바라는, 상황과 인식 사이의 괴리가 통일과제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

고 있다.

오늘의 상황은 몇가지 이중성을 띠고 있다. 한편으로는 40여년 계속되는 남북간의 첨예한 대결 속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결의 시대에서 대화의 시대로 전환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정책목표의 이중성이 있다.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국제정세는 긴장완화로 가는데 비하여 북한의 계속되는 정치공세로 말미암아 한반도에는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있다는 상황의 二重性이 있다. 이렇듯 「南朝鮮解放」이란 목표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도 전체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폐쇄정책의 고집과 사회주의 국가들 마저도 수용하고 있는 개방 및 개혁정책의 채택의 필요라는 이중성의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적 이중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유연성과 균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대결의 현실적 요건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새로운 전향적 통일정책은 그러한 인식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극도로 단순화된 反共의 대결논리나 「무조건적 통일」이란 환상을 함께 거부하는 입장이다. 특별한 지혜라기 보다는 건전한 상식에 입각한 그러한 입장이 적지 않은 불만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그것은 단순한 대결의 시대로부터 대결과 대화가 병립하는 시대로의 인식전환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유수호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 어쩐지 모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러한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으며, 국민은 정부의 능력을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능력을 믿

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시대착오적 인식의 단순화는 통일과 민주화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敎條化에서 연유되는 측면도 있다. 북한의 체제적 고립에 못지않게 딱한 知的 고립의 증세가 우리 안에 없지 않다. 아직도 사회정의의 실현을 퇴색한 계급이론이나 원시적 지역감정을 원용한 사회증오로 풀어가려는 非民主的 병폐가 우리의 知的 풍토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민이 자유로이 선출한 議會와 그 議會가 만든 法的 권위와 절차에 의존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거부하는 反의회주의적, 反법치주의적 독선과 敎條主義가 「統一」이란 포장지로 美化되고 은폐되는 知的 試圖가 유행하고 있다. 「統一은 민족 지상과제」라는 외침이 反민주를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렇듯 교조화한 통일론은 반체제적 폭력으로 연계되고, 이에 대한 극단적 반응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민주화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통일을 향한 유연하고 균형된 새 정책의 전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통일은 기적을 기다리는 요행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내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노력의 長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대결의 현실로부터 和解를 기초로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란 결코 화려한 行進이 아니라 몹시 지루한 시련의 등반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길고 험난한 과정에서 마음이 앞서는 흥분이나 서두름은 금물이다. 앞서 지적한 인식의 단순화는 그러한 흥분을 부추기거나, 정반대로 체념을 강요하는 양극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 정부도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려는 과도한 열성에서 기대와 서두름을 조장하는데 일조를 하였다면 마땅히 이를 反省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통일방안이 확정 발표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있어 좀 답답하다는 비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에 국민여론을 널리

수렴하여 최대공약수를 찾아낸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닌 기본가치에 맞는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한다는 것은 예상보다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어렵게 만들어지는 통일방안이라고 해도 萬人을 놀라게 할 기발한 묘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통일방안이란 건전한 상식에 기초를 둔 평이한 청사진이어야 한다. 이러한 새 방안은 國會 공청회 등 반드시 필요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곧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통일방안 강구 등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노력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민에 대한 정부의 믿음을 제도화하는 민주화의 진전을 반영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

分斷의 책임 통일인 責任

서울신문 「아침世評」 '89.8.15 李鍾興 천주교 대구 대교구 총대리신부

우리는 8·15를 광복절로 기념하나 현실적으로는 분단의 8·15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광복절에는 민족통한의 종막을 생각할 수 있으나 분단 8·15는 44년이 지나도 기약없는 분단의 고통을 계속 안고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분단 44년이 되는 이날 몇 가지 다 함께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

南北이 마음의 門 열어야

우리는 그동안 분단의 책임을 많이 거론해 왔다. 누구나가 알고 있듯이 조국분단의 책임은 미소 강대국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흥정한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은, 우리끼리라도 분단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민족단결을 거부한데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

다. 이와같은 주장은 이북에서도 逆으로 하고 있다.

역사의 결과는 분단이 되고 말았지만 출발부터 남북에 걸쳐 살아온 민족이 하나로 뭉쳤더라면 강대국들이 내 나라를 갈라먹기 흥정을 하더라도 우리의 단결로 이를 막을 수 있었던것 아니냐, 설사 흥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끼리 똘똘 뭉쳤더라면 누가 우리를 갈라 놓을 수 있었겠느냐 하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분단의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마땅하다. 이제라도 통일논의에 앞서, 또 기술적인 방법에 앞서 역사와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이 책임을 묻고 답해야 할 때라고 본다.

또 남과 북이 민족의 양심을 가지고 통일이 이념과 체제에 우선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통일론도 대화와 협상에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결국 이것은 민족성의 문제이다. 몇몇 사람이 平壤이나 몰래 다녀온다고 해서 될 통일이 아니다. 우리만이 마음의 문을 열 것이 아니고, 북의 지도자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열도록 해야 하며 때를 기다려야 할 줄 안다. 서두른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만이라도 團結하자

통일에 앞서 남쪽의 우리만이라도 단결해야 한다. 우리끼리도 단결 못하는 처지에서 통일을 서두른다면 이는 우스운 꼴이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는 단결하고 있는가? 정치현실만 보더라도 4당체제에 재야소리까지 합쳐서 정치는 걸돌고 있다.

서로 책임전가만 하고 국론 하나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을 안정속에 하나로 묶어주는 정치가 못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민에게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역정당을 만들어 주고 지역감정에 매달리고 있는 책임은 국민들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치열한 국제

경쟁속에 일치 단결해도 시원치 않은데 계속 분쟁과 대립속에 국력만 낭비하는 모습은 정치만의 책임이 아닌성 싶다. 대국에 눈뜨고 큰 정치를 하도록 해야 할 책임은 국민에게도 있다. 또 우리의 결속을 위협하는 각 계층의 대립과 갈등, 더욱이 재야 세력의 요구들도 민족단결의 차원에서 자체와 타협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서로 혈뜬고, 치고받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으면서 통일을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달지 않을 수 없다. 몽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진리를 생각할 때다. 어떤 사람은 국민의 저력과 수준을 믿어 낙관할 수 있다고 한다. 무엇을 믿고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라면 자화자찬의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를 비하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대립과 갈등속에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통일을 달성하려 한다면 우리만이라도 단결하는 데 눈을 떠야 한다고 생각한다.

同苦同樂을 生活원리로

우리가 통일을 달성 못하고, 우리끼리만이라도 단결 못하는 원인을 든다면 동고동락(同苦同樂)의 자세결여를 지적하고 싶다. 동족끼리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정신원리가 정치·경제에 반영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대립과 갈등은 해소되었으리라고 믿는다. 다같이 기뻐하고 다같이 고통을 나누는데 어느 누가 불만스러워 한단 말인가. 이제라도 이것이 정치의 원리가 된다면 정치는 생산적인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이 경제원리에 적용된다면 빈부의 문제·노사문제도 원만히 해결되리라 믿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최근에도 그린벨트안에 호화주택을 탈법적으로 지어 자기만이 잘 살겠다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야말로 반민족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좌경분자를 단

속하기 전에 이러한 이기주의자부터 단속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자생적 공산주의자와 북한지령에 동조하는 자가 나오게 마련임을 알아야 하겠다.

우리는 분단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기에 통일의 책임도 함께 져야 정당하다. 한쪽만이 책임질 수도 없다. 또 다같은 잘못이 있다면 다같이 지적되어야 정당하다. 북의 잘못을 덮어두고 남(南)에게만 책임을 돌린다면 통일로 가는 길은 될 수 없다. 또 더 큰 잘못이 있다면 큰 것 만큼 지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로 가는 길은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제잘못을 인정하려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믿는다. 답답하지만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함께 생각해야겠다.

南北「對決관계」를「協力」으로 전환시켜야

世界日報「특별기고」'89.8.15 金學俊 대통령사회담당 보좌역

오늘은 해방과 분단 44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 41주년이 되는 날이다. 기뻐해야 할 일과 비분해야 할 일이 함께 섞인「8·15 경축일」을 또한 차례 맞이한 것이다.

이 날이 되면 우리는 모두 민족통일의 염원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된다. 남북한의, 그리고 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분단의 멍에를 하루빨리 던져 없애고 통일된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자는 결의에 불타게 되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열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우리가 분단되게 된 배경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쏟게 된다. 분단의 경위, 그리고 분단을 가져온 요인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으로 부터 남북 분단구조를 해소시키고 통일을 이룩하게 할 교훈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이 해방과 더불어 찾아온 분단의 1차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강대국들에게 있다. 우리를 식민지로 만듦으로써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의 4대 연합국들로 하여금 우리의 운명을 식민지 처리문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게 만든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일본 제국주의, 우리의 운명을 우리와는 아무런 상의없이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연합국,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미국과 소련에게 우리는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엄숙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정치를 잘 살피면서 외교를 잘 해야 한다는 평범한 교훈을 얻게 된다. 자신들의 국가이익만을 앞세우는 강대국들의 날카로운 대립이 주류를 이루는, 그러면서도 상호 의존도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화해와 협조의 측면도 중시할 수 밖에 없는 국제정치의 動態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목표들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외교를 유능하게 펼쳐 나가야 하는 것이다.

다시 主題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분단의 책임을 따지건데 우리 겨레 스스로도 책임의 일부를 지지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책임은 적어도 세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韓末에 우리 조상들이 근대화를 성취하지 못한 잘못이다. 특히 지도층이 大局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小我的 利益에 얽힌 채 싸우다가 근대화의 기회를 잃어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되고만 비극의 과정에서 이미 분단의 씨앗은 잉태되고 있었다 하겠다. 벌써 한말에 열강들은 한반도의 분단을 협상하고 있었는데, 조정의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실 자체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 지도층이 얼마나 무능했던가를 말해준다.

둘째, 항일 독립운동이 사분 오열되었다는 사실이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배 아래서 참으로 많은 애국투사들이 나타나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웠음은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항일 투쟁세력은 지역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대립되어, 하나의 통일된 세력이나 집단 또는 망명정부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만일 우리 애국선열들이 단결해 통일전선을 구축했거나 통일된 망명정부를 세워 열강의 승인을 얻었다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세째, 외국군의 점령아래 놓여 있던 해방 3년의 시기에 우리 겨레는 처절하게 분열되었다는 사실이다. 남·북으로 갈린 데 더하여 좌·우로 나뉘어, 生死를 건 피나는 싸움을 벌였던 것이다.

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에 찾아온 분단의 책임은 그 상당히 큰 부분이 국제정치에 있는 것이다. 그 때부터 3년이 지난 48년에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북한에서는 공산정권이 세워짐으로써 분단이 공식화된 데 대한 책임 가운데 적지않은 부분은 좌·우의 반목과 남·북의 대결을 벌인 우리 겨레에게 돌아간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단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지난날에도 그러했지만 오늘날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할까. 지난날에 비해 오늘날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돌아섰다. 간단히 말해 열강은 긴장완화와 상호협력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따뜻한 물줄기는 한반도에 대해서도 밀려오면서 남·북한의 화해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적 되어야 할 점은 우리 겨레의 운명에 대해 우리 겨레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가 지난날에 비해 훨씬 넓어졌다는 사실이다. 우리 겨레의 힘이 커졌으며 민족적 각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겨레가 단합하여 남·북의 대결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그 바탕 위에서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어 추진

한다면, 열강은 이것을 방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열강이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성심 성의껏 노력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열강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6천만 동포가 한 목소리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면 그 기세를 감히 꺾고자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盧泰憲 대통령의 지난해 7·7선언과 국제연합 연설은 큰 뜻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 두개의 연설은 한반도 안팎의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 겨레 스스로의 힘으로 남북한 관계를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성취하겠다는 미래 지향적이며 민족 주체적인 통일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 제의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대한민국 당국과의 공식적인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북한의 對南 적화노선에 사실상 동조하는 세력을 부추기는 등 공작적 차원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여기서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밀입북이라는 일련의 돌출 사건들이 일어나 오늘날 남북 대화는 당분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그 내부의 문제점들을 평화적으로 개혁해 나가면서 계속해 발전하게 될 것을 인정해야 하며 북한사회를 비록 조심스럽게나마 개방하고 민주화시켜야 한다. 북한이 그러한 길을 걸을 때 우리 겨레 스스로에 의한 평화통일의 길은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統一운동의 조건

朝鮮日報 「時論」 '89. 8. 16 劉載天 서강대 교수

추진은 政府가 담당

올해로서 해방 44주년이다.

말하자면 조국이 분단된지 44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뜻이다. 44년전 어제, 우리는 마침내 국권을 되찾게 됨으로써 독립된 민족국가 수립의 길이 활짝 트였음을 기뻐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정치세력 사이의 패권 싸움과 미·소 양국의 전후 세계전략에 입각한 한반도정책 등 내외분열 책동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당시 좌우세력의 패권주의와 이데올로기 갈등은 44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남북간 분단구조의 본질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체제내에서 그같은 양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같은 현상은 특히 우리의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에서 첨예하게 드러

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국론은 크게 분열되는 조짐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민의 합의를 이루어내는 일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과업에 성공한다면 우리의 통일역량은 그만큼 커질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에서 몇가지 성찰을 해보고자한다.

첫째, 통일정책의 수립과 그것의 구체적 추진은 정부가 담당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의된 통일정책을 세워야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동안 역대정권은 수시로 통일방안을 마련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의 합의를 요청한 바 없다. 정권의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추종을 요구했을 뿐이다. 그 결과 일관된 통일정책이 있을 수 없었으며, 통일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따름이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의 이 같은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된다. 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방안의 제시가 없다. 7·7선언만해도 통일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의지를 표현한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뒷받침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론 무마용이었을 뿐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거울삼아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태만이 통일정책의 창구를 정부로 단일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못 가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통일정책 수행의 단일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남북간 민간차원의 교류가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인식을 해야만 한다. 민간차원의 교류는 정부의 통일정책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은 그 권한과 기능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루어야 마땅하다. 특히 북한체제의 경우 「민간」이란 노동당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더욱 그러하다.

統一院 제기능 개요

셋째, 대한민국 건국 이후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권력기반의 조성과 유지를 위해 강대국 정치권력의 威光효과를 이용해 왔다. 집권자들은 의례 워싱턴을 방문하여 지지를 구하였으며, 일본정계의 거물들과 교류를 돈독히 했다. 마치 大兄에게 승인을 받는 꼴이었다. 그러한 종속관계와는 물론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겠지만, 6·29선언 이후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앞 다투어 김일성을 만나고자 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만나서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 방안 없이 그저 막연히 허심탄회하게 통일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이같은 행태는 다만 정치적 입지 강화의 전술일 뿐 통일역량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이며, 북한의 통일전략에 이용당하거나 국론분열의 소지를 만들기 십상이라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5공이후 남북간 정상회담의 개최에 심혈을 기울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정부의 정책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密使外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이 상존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남북간 정상회담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지않겠는가.

넷째, 통일의 창구를 정부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에 앞서 먼저 정부안에서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과정을 단일화하거나 통합해야 할 것이다. 통일원이라는 기구를 두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따져볼 일이다.

體制모순 극복 병행

다섯째, 통일방안의 제시에 있어 각 정당은 무조건 정부나 타 정당의 그것과 차별적인 방안, 이른바 독자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제시하려는 타성

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그같은 방안의 제시를 통해 보다 적절한 통일방책이 수립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고식적인 반대논리의 아집은 버려야 옳다는 뜻이다.

여섯째, 통일이 우리 체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논리의 허구성을 깨달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 체제의 모순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함으로써 통일에 더욱 가까이 간다는 인식을 굳건히 하고, 그것을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옳다. 오늘날 남쪽에 고개를 들고 있는 북한 체제에 대한 호의적 인식은 다름아닌 우리 체제내의 모순과, 우리 정치지도자들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반작용이라는 점을 이 땅의 정치지도자들과 기성세대는 깊이 깨달아야 하겠다.

統一論부터 統一할 때

京郷新聞 「時評」 '89. 8. 17 金容述 편집국 부국장

통일문제는 뜨거운 열정만을 갖고 논의하고 주창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차가운 이성만을 전면에 내세워 너무 외교집으로 다룰 경직된 속성의 것이 돼서도 안된다. 더구나 사회상류의 일부 기득권층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냉소적이며 도피적인 자세로 통일문제를 식은 밥 취급하는 풍조는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

얼마전 고등학교 선 후배들이 모인자리에서 우연히 남북 통일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이미 인생 50의 중반을 넘어서신, 모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을 맡고있는 한 선배가 『이런말을 하면 욱먹을지 모르겠으나』라고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統一無用論을 던지시 제기, 좌중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경제가 뒷걸음질치는 상황이라면 통일을 해서 당장 잘 살 길이 열릴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통일문제는 아예 먼 훗날의

일로 제쳐두는 것이 더 유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 정당의 정책문제를 다루는 동창이 정색을 하며 자못 경고조의 반론을 전개했다.

『선배님, 이런 좌석이니 망정이지 다른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면 큰 망신을 당합니다. 기독교층의 자기보호를 위한 반민족적인 언동으로 지탄받습니다.』

『하도 불안하고 답답해서 하는 말이지 나라고 통일을 싫어하겠습니까. 조용하고 국민적 화합이 이루어진 가운데 통일이 추진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몇마디 더 주고 받다가 결국 결론은 통일의 추진은 시급히 정돈돼야 한다는 데로 귀착됐다. 중구난방식의 통일운동은 말할 것도 없이 통일문제를 권력층의 독점물인양 고집하여 자가도취에 빠지는 경향도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결론이었다. 요컨대 통일운동이 당장 통일돼야 한다는게 중론이었다. 통일론조차 통일하지 못하고 어찌 통일에 접근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집단반성이 좌충우돌의 격론들을 조용히 잠재운 셈이었다.

徐敬元의원 밑입북 과문이 채 사그러지기도 전에 林秀卿양과 文奎鉉신부의 판문점 통과 귀환사건이 또다시 일어나 통일문제는 여전히 전국을 들끓게하는 뜨거운 쟁점으로 남게 됐다. 아마 9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대학가는 더욱 소연해질게 틀림없다. 언제까지 그런 열풍이 계속될지 참으로 불안하고 두렵다.

이제 정치권이 전면에서 통일문제를 정돈하고 선도할 시점이 된 듯싶다. 더 이상 방치하고 주저하다가는 나라의 형편이 사공 잃은 배의 꼴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이 없다. 정부도 서둘러야 하겠고 야당 역시 냉정해져야 겠다.

먼저 때의 성숙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물론 팔짱끼고 감이 익기를 기다려 보자는 그런 기회주의는 배격돼야 한다. 그러나 땀감을 어서 익으라고 쌀겨 속에 묻어두었다가 몽땅 썩혀 버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나 성급성으로 덤비다가는 될 일도 그르치기 십상이다.

70년대초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키신저 국무장관을 중국에 보내 극적인 국교정상화를 성취해 낸 것은 자세히 분석해 보면, 美·中 양국의 국가이익이 서로 공유지대를 이미 많이 형성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우리가 자주 상고하는 蘇秦의 合縱策의 성공은 고대 戰國時代에 중국대륙 서방에 있던 秦의 힘이 동방에 흩어져 있던 燕·齊·韓·魏·趙·楚 등 6국의 연합세력보다 약했던 데에 근거했다. 또 합종책을 무너뜨리고 秦에 의한 天下統一의 기반을 다진 張儀의 連衡策도 秦의 힘이 워낙 강대해져 6국이 집단적 동맹을 꺼리고 秦과 개별적으로 동맹을 맺지 않을 수 없게 된 시대적 배경 때문에 성공했다. 두개의 동맹체제는 결국 시대적 흐름의 산물이었다고 보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 관계에도 국제정세의 유리한 여건 성숙이든 민족내적인 에너지의 충만이든 어떤 흐름에 고무적인 요소가 보일 때에만 통일로로의 응집력이 가속화 될 수 있다. 그것을 盧泰愚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북한의 民主大原則의 수용이라고 규정했지만 하여튼 北韓내부의 權力構造에 조금이라도 민주적 변화가 없는 한 맹목적 통일운동은 역량의 소모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단언해도 좋다. 때의 흐름에 항상 기민하고 분별있는 통합적 대응이 언제나 필요하고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통일정책은 정치적 경쟁자를 탄압하고 도태시키는 도구가 될 수 없으며 더구나 정권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돼서도 안된다. 아무리 실정법이지만 고쳐야만 할 법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여 질식할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 녹슨 칼은 대장간에 보내 다시 버려야

더 오래 쓸 수 있다.

그대로 마구 휘두르다 보면 조만간 칼은 부러지고 칼의 소유자 또한 알몸으로 무방비 상태에 빠지고 만다. 칼은 번쩍 빛나되 칼집에 있을 때가 더 공포감을 주는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권을 잡아 나라를 경영하는 일은 그만큼 어렵고 인내와 정도가 요청되는 무거운 짐인 것이다.

반대로 엄밀하고 좁은 의미에서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정권세력의 고유한 권한이자 민족에 대한 엄숙한 책임사항이다. 야당을 비롯한 다른 정치세력이 정책수립과 집행에 경쟁적 지위를 누릴 특권은 보장될 수 없다. 다른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면 몰라도 그들이 갖고있는 통일정책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이며 잠재적 실현성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다. 정치적 야심가의 천재성을 선전하고 공명심이나 충족시키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통일정책에 있어서 극우와 극좌의 양극단론이 수용될 여지는 본질적으로 매우 좁다. 기득권의 수호를 위한 방패가 될 수 없으며, 극소수의 모험적 과격주의자를 위한 전위적 실험도구로 전략패셔도 안된다. 통일은 타협의 산물일 수는 있으나 정복의 개념은 아니다.

모든 統一주장이 善인가

中央日報 「時評」 '89.8.23 李相禹 서강대 교수

통일이 민족적 罅원이라고 전쟁으로 성취할 수는 없다. 「이 민족 살리는 통일」이어야 하는데 민족을 죽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또한 아무리 통일이 절박한 민족적 과제라 하더라도 통일을 앞당긴다는 명목으로 공산당 만세를 부를 수는 없다.

민족사회 구성원 모두의 人權이 보장되고 자유가 지켜지는 하나의 민족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일인데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체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통일의 목표를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통일된 越南보다 차라리 분단된 西獨을 택하겠다』고 하신 한 기독교 성직자의 말씀은 이념과 체제가 통일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밝힌 우리 자세의 선명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상대 인정해야

우리의 이상은 평화와 통일이다. 그러나 北韓이 프롤레타리아계급 독재 체제를 고집하는 한 타협에 의한 통일은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통일노력을 포기할 수도 없다. 두고 온 가족을 살아 생전에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이산가족의 절규를 더 이상 못본 척 할 수 없다.

南北韓간에 존속해 온 準전쟁상태를 더 이상 내버려둘 수도 없다. 분단의 고통을 줄이는 일은 시간을 재촉하는 급선무다.

이상과 현실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민족을 사랑하는 현실적인 행위일까. 솔로몬의 재판만큼 어려운 결정이다.

우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 통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평화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모아야 한다. 평화를 구축하여 그 토대 위에서 통일을 모색해야 한다.

평화의 전제조건은 두 당사자가 서로가 서로를 대등한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의格을 인정하지 않고는 협상이 불가능하다. 상호 존재의 대등성 인정이 곧 平이다. 그리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認容하고 共存의 合意를 이루어야 한다. 다른 존재간의 共存을 和라 한다. 平和란 곧 대등한 존재간의 공존합의를 말하는 것이다.

지난 40년간 우리를 괴롭혀 온 北韓당국을 우리의 협상 대상으로 認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참아야 한다. 平和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민족사회의 단일성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긴 역사에서 보면 정치는 짧고 可變의이나 민족은 영원한 것이고 불변적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의 민족사회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정치통일을 기대할 수 있다.

민족이 갈리면 그 때는 통일의 대상을 잃게된다. 서로 다닐 수 있고 또

한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생활공간의 통합, 그리고 다함께 「우리」라고 느끼는 공동체 의식의 共有, 함께 잘 살자는 共榮의 자세 등이 갖추어질 때 우리는 하나의 共同體(community)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선 「韓民族共同體」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자유왕래, 거주지 선택자유 부여, 경제교류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이 못 이루어진데 대한 아쉬움은 크더라도 개개인이 겪는 분단의 아픔은 한결 덜어질 수 있게 된다.

지난 15일 대통령 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바로 民族共同體의 회복과 발전을 핵심으로하는 통일정책의 방향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李洪九 통일원 장관도 이 점을 부연 설명하였다.

때 늦은 감이 있으나 이러한 現實主義的인 정직한 자세를 밝혀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은 통일정책에 관한한 정직하지 못하였다. 비현실적인 줄 스스로 알면서도 국민의 통일열망을 수용하여 자기의 정치적 立地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을 주창하여 왔었다. 통일을 그 자체로 놓고 허심탄회하게 다루려 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당의 정치적 이미지 부각의 도구로 써왔었다.

정치도구 이용 안돼

그래서 통일논의에 많은 혼란을 일으켜 왔었다. 그러나 통일문제만은 정치의 도구로 써서는 안된다. 최근 방송토론에서 平民黨의 趙淳昇의원은 통일 정책에서의 「現實主義的 접근」에 대하여 정부 당국자보다도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 정치도 많이 성숙해 가는구나 하고 기쁨을 느꼈었다. 여야간에 모든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 있는 정당이다.

통일의 기본에 관한 어떻게 다른 정책이 있겠는가. 다만 구체적 실천 방안에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정책과 달라야 야당의 입장이 살고, 야당주장과 달라야 정부의 위신이 서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편협성들을 서로 버려야 대다수 국민이 수긍하는 현실적인 통일정책의 대강이 서게 된다.

통일협상의 대상인 北韓 당국은 노동당 목소리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우리의 목소리가 네갈래 다섯갈래로 나뉘면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의 노리갯감으로 우리 스스로를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북통일의 진정한 출발은 우리의 國論 통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한다.

민주정치는 다양성 존중을 생명으로 한다. 그러나 다양한 견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E Pluribus unum)이 민주정치이지 다양한대로 버려두는 것이 민주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無政治일 뿐이다.

그동안 여야간에 여러 정치지도자들이 金日成 주석을 만나려고 애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오늘의 상황에서 그 분들이 金正日을 만나 무엇을 성취하겠다는 것인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는 알팍한 의도가 담겨졌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金日成 주석을 만나기 보다 여야 지도자들끼리 자주 만나 통일정책 기본방침을 승意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다.

統一정책 일관되게

모든 통일주장이 善인가. 그럴 수 없다. 민족을 살리는 통일, 모든 이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통일주장은 善이나 그렇지 않은 통일주장은 통일을 저해하는 惡이다.

순수한 통일열정이 모든 통일주장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열정과 주장

사이에 바른 논리가 있어야 公論이 될 수 있다.

당장의 인기를 초월하여 민족 전체의 이익에 맞는 주장을 펼 때 정치인의 참 용기가 발현된다. 새 통일정책 청문회에서는 국민이 모두 따를 수 있는 한가지 통일지침에 모든 黨이 합의를 이루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국민들은 통일된, 그리고 일관된 통일정책이 서야 발벗고 따를 것이다.

작은 것부터

한국일보 「時評」 '89.9.1 安明基 변호사

이웅평씨가 어디엔가 쓴 글에, 자기가 남한에 와서 남한사회를 이해하는데 3년이 걸리더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 북한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고 자유의 귀중함을 알고 가족까지 버리고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이 남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3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도시 한 복판에서 학생과 전경이 화염병과 최루탄을 쏘아대는 그러한 「자유와 민주」를 이해하려면 그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무조건 통일부터 해 놓고 보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우리에게 통일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데올

로기라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제도 밑에서 사느냐, 사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 하는 문제에 불과한 것인데 이데올로기가 무엇이 중요하나, 통일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제도에 사느냐 하는 것이 어찌해서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이런 제도 저런 제도에 서다 살아보고서 하는 말인가. 어떤 제도는 그 밑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는 그런 제도도 있을 수 있다. 북한 동포를 껴안고 통곡을 한다든가, 그리던 고향을 찾는 감격이라든가, 같은 민족끼리 통일된 나라에서 사는 기쁨이라든가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センチ멘털한 생각만으로 통일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선 이해하는데 3년이 걸리는 자유와 민주 가지고는 안된다. 우리는 먼저 「자유와 민주」의 質을 높여야 한다. 이해하는데 3년이 아니라 3週도 안 걸리는 정도로 자유와 민주 質을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러나 그 통일은 방법에 있어 평화적이어야 하고 결과에 있어 민주적이어야 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면 무슨 상관 있느냐고 하는 통일의 감격을 향한 성급한センチ멘털리즘으로는 안된다. 문목사, 문신부, 임양이 밀입북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것은センチ멘털리즘이다.

만약 지금 당장에 군사 분계선을 철폐한다고 하자. 백주에 대로에서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자유와 민주,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가 들어와 서로 자리 차지를 다투는 자유와 민주, 추석에 귀성 열차표를 사려면 매표소에 가서는 안되고 폭력배와 선이 닿아야 하는 자유와 민주를 북한주민들이 노타입으로 이해하리라고 생각하는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하는데 유세장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보이며 이것이 자유이고 민주라고 북한주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자는 말하기를 딱딱한 나무일수록 쉽게 부러진다고, 자유의 바람이

불면 북한사회는 쉽게 무너진다고 한다. 물론 그런 북한 주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이가 제일 위대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사람은 김일성이고, 우리의 현재의 생활은 행복하다는 고정관념이 너무 딱딱해서 안부러지는 주민도 많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방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현재 40대일터인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김일성의 일대기를 의무적으로 줄줄 외운 사람들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면 반통일분자라고 할는지 모르나 필자는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이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도 안되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밟아야 할 순서가 있다. 앞에 말한 최루탄, 1교실 2교사, 그런 문제보다 더 작은 문제조차도 우리는 해 내지 못하고 있다. 등산길에 쓰레기 버리고 아무데나 침 뺏고 담배꽂초 버리며, 횡단보도나 신호등의 무시 및 정찰제, 줄서기 등 이런 아주 작은 것들도 북한주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이 작은 일들은 통일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먼저 해야 할 일,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을 해내지 못하고서 통일이라는 거창한 일부터 하려는데 무리가 따른다.

그렇게 엄격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에서 정부 비판의 자유가 생기고 중국에서는 천안문광장사건이 일어났다.

동구라파쪽은 체코의 프라하의 봄에서 보는 것처럼 소·중국보다 앞서 자유화운동이 일었고 폴란드에서는 반공산주의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실험은 끝났다. 공산주의 가지고는 경제도 안되고 정치도 안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런데 북한만이 홀로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에도 개방정책이 어느정도 불가피한 것이 틀림

없다.

우리가 지금 민주화를 해야한다는 뜻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말이다. 이해하는데 3년이 걸리지 않은 수준까지 민주주의 質을 높여야 하고, 우리가 당장 그리고 쉽게 해낼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해 내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도 자유의 바람이 들어갔을 때 남북간의 간격은 좁아질 수 있다.

이때 통일은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닐까. 누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 상상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졌다. 통일도 이처럼 기적적으로 성취될 수도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만약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민주화나 등산길의 쓰레기 문제같은 통일보다 작은 것부터 먼저 하자.

「단계적 統一論」 국민적 合意 확인

서울신문 「특별寄稿」 '89.9.6 金學俊 대통령사회담당 보좌역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민주화와 통일이다. 이 가운데 오늘날의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화라고 생각하지만 통일 역시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지금으로부터 6년 뒤인 1995년이 되면 민족분단 50주년이 되는데 이 시점에는 적어도 평화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밝은 전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남북한 관계가 크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當爲性에 비춰 볼 때, 통일에 대한 절박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6공화국이 그 출범 직후부터 남북한 관계의 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병행하여 정당들은 정당들대로, 그리고 사회단체들은 사회단체들대로 조국의 분단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하여 제6공화국이 출범한 뒤 통일논의는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정책들과 구상들이 개진되어 왔다.

이러한 통일논의 과정에서 뚜렷하게 부각된 점들 가운데 하나는 정부의 통일정책이 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합의기반이 훨씬 더 넓어져야겠다는 점이었다. 적어도 원내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 사이에서 기본적 양해가 뒷받침할 때 정부의 통일정책은 보다 더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동안 국회에서 열렸던 통일문제에 관한 공청회는 그러한 맥락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민정 평민 민주 공화 등 4당대표가 모두 自黨의 정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우익은 물론 재야의 단체 대표들과 이론가들 역시 자신들의 구상을 제시했고 이러한 정책들과 구상들을 둘러싸고 아무런 제약 없는 토론이 활발히 벌어졌던 것이다. 통일정책 결정과정의 民主性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 셈이다.

공청회에 나타난 의견들을 보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들에 주목하게 되었다.

첫째,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통일은 몇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룩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70년대 이후 그러한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한국정부의 단계론적 통일론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또는 통일을 늦추겠다는 「反통일론」이라고 비난해 왔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에서는 재야 인사들도 단계론적 통일론을 제시함으로써 단계론적 통일론은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풀이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가 여러차례 강조했듯이 동족상잔을 겪지 않은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그리하여 상호 불신과 상호 증오의 벽이 두껍지 않은 동서독의 경우와는 달리 남북한은 전쟁을 경험했고 그 뒤에도 치열한 군사대결을 유지함

으로써 상호 불신과 상호 적대감의 벽이 높다. 더욱이 남북한 각자가 상대방과의 보완이나 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기 위해 分離發展을 추구해 왔기에 體制 異質性의 정도가 높다.

한반도 분단의 상황을 이렇게 볼 때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과 방법은 漸進性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급하거든 돌아가라』는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이 함축하고 있듯이 통일문제가 시급하면 시급할수록 침착하게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역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고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풀어 말해 『한반도에 남북한의 두 체제 또는 두 실체가 엄존한다는 현실을 인정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70년대 이후 이러한 주장 위에서 통일정책을 세웠다. 남북한의 상호 인정 없이 평화통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필자는 이해한다. 이에 반해 북한은 한국정부의 그러한 입장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라고 매도하면서 「조선은 하나」라는 선동적인 구호로 대응해 왔다.

남북한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이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며, 따라서 남북한은 통일을 위해 성실하고 꾸준하게 일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통일이 아무리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해서 전쟁 또는 북한이 말하는 「인민 해방전쟁」이나 「민족 해방전쟁」의 방식으로 성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평화통일은 간단히 말해 대화와 협상에 의한 통일이다. 그렇다면 남북한은 상대방의 존재와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청회의 참석자들이 남북한 상호 인정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은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의 출발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

을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정당들과 단체들 사이의 견해 차이도 많이 나타났다. 주한미군의 문제와 국가보안법의 문제 등등에 대한 의견 차이는 특히 원내 정당들과 재야단체들 사이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한은 언제나 대화의 선행조건들을 제시해 왔고 한국정부는 한번도 대화의 선행조건들을 제시한 일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정부의 자세가 훨씬 개방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정부도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것은 북한의 민주화와 개방이다. 북한사회가 金日成 1인 지배체제 또는 金日成·金正日부자 세습체제 아래 계속 놓여 있는 한,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남조선해방」론에 매달려, 한국에 대해 친북한 좌익 폭력혁명 세력을 뼈대로 하는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쓰는 한, 평화통일의 길은 멀기 때문이다.

『이젠 北側이 대답할 차례』

京鄉新聞 「칼럼」 '89. 9. 11 韓昇助 고려대 정경대 학장

오래 뜸들인 끝에

盧泰愚 정부의 새 통일방안이 오래 뜸들인 끝에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금년 초부터 새 것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터였다.

그것이 2월인지 4월인지 그러나 6월이 가고 8월의 광복절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 이번 가을 定期國會에서 대통령 특별연설로서 나오게 된 것이다. 새 통일방안의 형태와 성격은 훨씬 이전부터 개략적으로 추측된 것이었다. 그것이 각계각층 그리고 여러 정파의 의견수렴과 재검토를 거치느라고 이처럼 지연되어 온 것 같다.

새로 발표된 통일방안은 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이라 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측은 궁극적으로 남북한에 통일민주공화국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분단 40여년간 누적된 뿌리깊은不信과 오랜 대결, 적대의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통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으로서 南北聯合 기구를 만들어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남북연합 기구는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그 아래 쌍방 정부대표로 구성된 南北閣僚會議과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南北評議會를 설치한다. 그리고 그 두 기구의 합의사항을 수행하는 실무부서로서 共同事務處를 둔다. 그리고 서울과 平壤에 常駐 連絡代表를 파견할 것이다.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은 비무장지대인에 평화구역을 만들어 설치하며 그 平和區域은 점차 統一平和市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

이러한 남북연합기구를 설치하기에 앞서서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한한 빨리 열려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 憲章에 합의해야 한다. 이 헌장에는 평화통일의 기본방안, 상호불가침, 남북연합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통일방안과의 비교

제6공화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1982년 1월에 선포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통일된 單一民族國家를 건설하는 과정과 절차를 막바로 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오늘과 같은 남북한간의 불신감과 대립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단번에 통일할 수가 없다. 따라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먼저 남북한 주민들이 한 민족으로서의 심정과 생활권의 統合을 선행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남북연합기구가 들어서서 남북이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共存 共榮하는 가운데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統合을 앞당겨야 한다.

이것은 중간형태의 통일을 바라는 것이며 여기서 신·구방안에 기본적 차이가 있다. 이것은 새 통일방안이 그만큼 현실화하고 남북문제의 핵심으로 접근하였음을 보여준다.

둘째, 前者의 통일방안은 통일될 때까지의 잠정적 과도조치를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잠정협정으로서 제의하고 있다.

남북간의 互惠平等의 관계유지,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체제의 상호인정과 내정불간섭,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상호교류와 사회개방, 세계 여러 나라들과 체결한 쌍무적인 국제 조약과 협정의 존중 등 이러한 잠정조치가 전자의 통일방안에서는 부수적인 위치를 차지한 격이다.

그러나 새 통일방안에서는 南北閣僚會議와 南北評議會의 주요 과제가 부각되어 있다. 반면에 통일국가 건설의 과정과 내용은 부수적 지위로 밀려나 있다.

세째, 종전의 통일방안은 一民族 一國家 一體制를 겨냥한 통일방안이었다. 그러나 새 통일방안은 一民族 二國家 二體制를 중간과정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종전의 통일방안은 얼른 보기에는 통일에의 적극적 의욕을 담은 방안인 것 같지만 사실상 실현가능성은 전무한 것이었다.

북측이 人口比例에 의한 총선거를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연방제는 그것이 연방인지 연합인지 애매모호하지만 새 통일방안은 중간형태로 연합제를 명시하므로 북한측이 받아들여서 손해볼 것이 없다.

북한측의 반응

통일방안은 아무리 사려깊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꾸며졌다고 할지라도 쌍방중 어느 한쪽이 외면하거나 거부한다면 소용이 없다. 새 통일방안은

국내적으로는 거의 거국적이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새 통일방안이 이 나라의 학계와 정계의 컨센서스를 수렴하여 만들어졌으며 또 역대정부의 통일방안이나 제안 내용의脈을 남김없이 계승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내용은 남한에게만 유리하고 북한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도리어 북한측을 우리의 동포로서 걱정해 주고 돌보아 주려는 선의가 담겨져 있으므로 기만적인 북한의 방안보다 도덕적인 우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이나 친북세력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거부하고 비난하고 나올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 이유는 그 통일방안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先南朝鮮革命 後赤化統一」의 대남적화전략을 계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북측의 통일방안은 高麗民主聯邦制 통일방안이다. 그 내용의 좋은부분은 새 통일방안속에 흡수 소화될 수가 있다. 그러나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은 고려연방제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① 한국측에서 反共政策과 國家保安法을 폐기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 ② 북측이 조직한 용공단체를 비롯한 공산주의 활동의 합법화 ③ 反共政權은 퇴진하고 聯共政權을 수립할 것 ④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치, 주한미군의 철수 ⑤ 미국은 분열주의적 두 개의 조선 조작책동을 중지하고 내정간섭도 중단해야 한다. 고려연방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대남 적화 공작적 차원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한 어떤 통일방안도 북한측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배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뻔뻔스러운 요구를 계속할 것인가 또는 철회하게 될 것인가는 남한정부와 국민의 자세에 달려 있다.

만일 남한의 정부와 국민, 여당과 야당이 새 통일방안에 굳건한 합의를

이루고 단결하여 정치안정을 이루고 그제서야 북한의 대남 분열공작이 더 이상 먹혀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될 때 북한측은 그들에게 손해될 리가 없는 새 통일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남북한의 통일은 비록 초보적인 성격의 통일이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북측이 우리의 통일방안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달성될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反統一세력」이란 말

東亞日報 「東亞광장」 '89. 9. 23 南時旭 논설위원실장

지난 추석 때 北韓 출신 실향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板門店 입구의 臨津閣에서 북쪽을 향해 차례상을 차려놓고 큰 절을 하는 모습을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다가 언젠가 신문사에 걸려온 독자전화 한 통이 문득 생각났다. 그때 아직 林秀卿양 비밀 월북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다.

『귀지에서 統一을 바라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썼는데 과연 그런가요』 전화는 이같은 독자의 항의였다. 韓國사람치고 통일을 바라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통일은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글이 신문에 나간데 대한 항변이었다. 통일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런 글을 실으면 되느냐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통일을 반대한다는 말인가. 이 땅에 삶을 영위하는 자 치고 두동강난 제 조국이 합쳐진다는데 누가 이를 마다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남의 식민지가 되고 해방이 되고도 또 분단의 아픔을 겪은 민족이며, 6·25사변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냈으며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아직도 동족끼리 원수처럼 되어있는가. 또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그동안 어떻게 설움을 받은 약소민족인데 어느 누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런 反民族的 인간이 이 땅 어느 구석에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 말썽 많던 북한의 平祝 참가차 지난 6월말 平壤에 몰래 들어간 林양의 한마디는 우리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었다.

『南韓정권은 통일을 바라지않은 세력이다...』

體制否定 악순환

언젠가 신문사에 걸려온 전화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다. 국민이 뽑은 정부가 정말로 「反統一 세력」이라면 일은 끝장이 난 것이 아닌가. 그런 정부를 어떻게 국민이 용납한다는 말인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말들이 마구 나오게 된 것인가.

오늘의 통일문제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통일 자체도 어려운 문제지만 이에 못지않게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 내부사정이 문제다. 文益煥목사 방북이래 잇따라 일어난 밀입북 사건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판정소동까지를 합한 이른바 公安문제 公安政局문제는 모두 여기서 비롯된다.

집권세력을 反統一 세력이라고 생각하다가 보니 그러면 내가 나서야 되겠다고 일을 벌인다. 요새 흔히 쓰는 말로, 동기는 순수한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이용당하기도 하며 끝내는 어마어마한 죄명이 붙는다. 그러면 당사자는 5共때처럼 정치범 양심범이 되고 또다시 人權문제 시비로 발전하여 외국에서까지 말썽이 된다.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것도 그들로서는 어차피 악법이요 집

권의 도구라고 보면 그런 법률로 하는 재판이란 처음부터 저항의 대상이 되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면 명색이 自由民主主義를 한다는 우리 체제 자체가 부정되고마는 악순환을 부른다. 결국에는 통일은 나중 문제이고 우리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되고 만다.

그러면 도대체 反統一 세력 운운하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북한의 선전 때문이고 둘째는 남한 내부의 일부 세력들의 선전 때문이고 셋째는 멀쩡한 사람들이 별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부지불식간에 이런 주장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統一의 열쇠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른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가장 큰 장애를 駐韓美軍과 反共政權의 존재로 본다. 따라서 그들 눈에는 美帝 地主 매판자본가 반동관료가 反統一 세력으로서 타도 대상이다. 이를 남한 인민 자신들이 붕괴시켜 인민정권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이다. 통일 방법은 미군철수-반공정권 타도-인민정권 수립-북한과의 합작통일, 이런 순서다. 말하자면 남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세력 자체가 反統一 세력인 셈이다.

남한의 일부 세력들은 그동안 여러 갈래의 주장들을 폈으나 최근에는 이른바 「민족·민주세력」과 여기에 반대되는 제도권으로 정치세력을 양분하는 경향이 많다. 「민족·민주세력」이 있으면 당연히 「반민족·반민주세력」은 있게 마련이다. 전자는 광범한 민중에 기반을 둔 세력이고 후자는 외세와 이에 결탁한 군부파소세력 종속적 재벌 등 親美 反北세력이라는 것이다.

얼른 보면 북의 주장과 어디가 다른지 구별하기 힘들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이같은 圖式이 계급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같은 특정 이데올로기적인 주장이 별다른 저항없이 일반에게 까지 침투하여 걸핏하면 「反統一세력」운운 하는데 있다. 독자전화의 주인 공이나 林양이나 어쩌면 文목사까지 이런 생각에 물들어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가. 소위 「反統一 세력」이라고 매도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 본인들에게 물어 보라. 그들은 다만 기존 체제가 무너지는 통일을 원하지 않을 뿐이다.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은 통일된 나라에서 권력을 잡으면 더 좋을 것이고 재벌 기업은 통일이 되면 돈벌 시장이 넓어서 좋을 것이다.

물론 이들은 공산화 통일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 체제가 북한으로 확대 되는 통일을 원하고 있다. 이들이 「反統一 세력」이라는 論法대로라면 反共 통일을 반대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反統一 세력」이 되지않는가.

우리 내부에서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고 「反統一 세력」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分裂主義임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평화통일은 이 모든 주장을 용광로에 담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南北韓 통일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月刊 展望 「초점」 '89. 10. 尹泳五 국민대교수

현 시점에서 분단이 된 지 4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가능성은 엿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서 남북한의 통일방안이나 정책이 불충분해서는 아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남한의 점진적 접근-기능주의

남한에서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한 때 북진통일을 주장한 적도 있으나, 주로 분단 상태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다른 체제와 경쟁을 통한 공존을 모색했다. 정부가 통일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한 것은 1970년 8월 15일 박대통령이 발표한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구상」에서였다. 이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73년 「6·23 평화통일외교정책 특별선언」 그리고 1974년 1월 18일 「남북상호 불가침협정 제안」등을 거쳐 1974년 8월

15일, 그동안의 통일정책이 종합 정리되어 「평화통일 3대원칙」으로 발표되었다.

3대 기본원칙이란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둘째, 남북간에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남북대화를 성실히 추진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냉전상황을 데탕트로 바꾸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상호 불가침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골자는 첫째, 남북이 서로 절대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할 것, 둘째 남북은 상호 내정간섭을 하지 말 것, 셋째, 여하한 경우라도 현행 휴전협정은 그 효력을 존속시킬 것 등이다. 한마디로 3원칙은 「선평화 후통일」의 논리와 과정을 따르자는 것이다.

6.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단계 중시

다음으로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에서 전대통령이 제의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화합과 통일의 두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인 방안을 택하였다. 첫 단계는 화합을 위한 정책으로서 남북한간의 긴장과 불신을 해소하고 나아가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교류와 협력을 기하기 위하여 「남북한 기본관계에 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20개 항의 실천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두번째 단계는 남북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민족통일 협의회의」를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번 9월 11일 노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

일방안」은 정부가 각계 인사를 초청해 의견을 듣고, 국회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정부의 통일방안과 차이가 있다. 새 통일방안은 두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1 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목표로 한다는 점과 중간단계인 민족공동체 단계를 중시한 점이다.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은 통일의 중간단계보다는 최종 목표인 통일에 주력하는 가운데 그 실현성 여부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새 통일방안은 5공화국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새 방안에서 통일헌법 제정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의회적 성격의 남북평의회는 종전 민족통일협의회를 발전시킨 것이며, 첫단계 과도적 조치로서 한민족공동체헌장을 남북 합의하에 채택토록 한 것은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 협정 체결과 맥락을 같이 한다. 종전에 제안된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는 조항은 새 통일방안에서 민족공동체 회복 및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조항으로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 비해 진전된 부분은 남북 공존단계에서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를 민족공동체적 성격으로 규정, 이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남북한은 40여년간 문호를 폐쇄하여 체제와 사회제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질화의 현상은 매우 심각한 바 「한민족공동체」의 중간단계를 통하여 동질화를 이룩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며 동시에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새 통일안은 통일헌법에 의한 자유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제시, 통일국가의 최종형태로 남북 단일국가를 설정함으로써 1민족 2체제를 최종 형태로 제안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안에 비해 분단 극복이라는 원칙적 측면에서 진일보한 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지나치게 단일국가라는 원칙과 북한의 통일방

인을 의식한 가운데, 분단국가의 통합이라는 면에서 실현가능성이 적고 여러가지 무리가 따르는 단일국가안을 채택한 것은 선진적인 면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

북한의 개방화가 필요

한편 북한은 1950년대에 무력통일을 주창하다가 그 이후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하는 가운데 남북연방제를 통한 통일을 주장하여 왔다. 북한은 미군철수를 요구하면서도, 남북 교차승인이나 남북한 UN동시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남북한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우선 불가침조약을 통하여 서로 위협을 느끼지 말아야 하며, 서로 상대방을 승인하는 것이 신뢰구축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남북한이 제안해 온 여러가지 통일방안은 순수한 통일목적 이외에 국내 정치 및 대외선전을 위해 만든 면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지나치게 하나의 방안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생각한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과 형태의 통일도 바람직한 것인가? 즉 「어떠한 통일도 선(善)」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유평등, 인권과 민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통일을 원한다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를 통하여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남북한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남한은 87년 6월항쟁 이래 속도의 완급은 있지만 민주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사회는 어디인가? 말할 것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국가중의 하나인 북한에서 대폭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김일성의 장기독재와 우상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세습문제, 북한내의 인권보장, 정치사상범의 석방 등 여러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한 통일논의를 위하여서는 6·25남침을 자행한 김일성의 퇴

진, KAL기 폭파만행에 대한 사과와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

김일성은 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해 왔다. 우리는 전제조건으로서 위에 언급한 여러가지를 모두 요구하지는 못할 망정, 단 한가지 북한의 개방화와 민주화는 당연히 요구해야 하겠다.

그런데 북한에 변화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여러가지 정책을 시도해야 하겠다. 예를 들어 「7·7선언」은 북한에 변화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세계가 개방과 신 대탕트로 나아가면서 북한이 고립화하는 가운데 무모한 일을 벌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남한에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 관계로 이니셔티브를 취한 것이다.

7·7선언 변질되어서는 안돼

7·7선언 이후 우리가 남북교류를 과감히 추진했다면 북한은 지금쯤 상당히 개방되었을 수도 있다. 종교인들이 방북하여 선교하는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을 일깨우고 대학생들이 평양대회에 참석하여 북한학생들의 경직된 언행과 달리 여타 국가대표들과 어울려 디스코도 추며 자유분방함을 보일 수 있었다면 우리가 「평화공세」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금강산이 남한의 기업가에 의해 개발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북한 정치구도에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불행히도 구태의연한 「안보수세」로 7·7선언이 남북한 긴장완화는 커녕 남한내에서의 좌경이니 반동이니 하여 국민간에 분열을 초래한 꼴이 되었다.

사실 6·29 민주화선언의 대외정책으로 나온 것이 7·7선언이라 할 수

있다. 7·7선언은 종전의 반공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벗어나 북방정책을 통해 공산권과의 교류를 증대하고, 남북한의 긴장완화를 통해 통일의 길을 모색하자는 정책이었다. 오늘날 그 실상은 어떠한가? 공산권과는 진전이 있었으나 정작 북한과의 관계는 7·7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욱 폐쇄적이 된 것 같다. 얼마전 보수주의적인 미국의 국무장관 베이커조차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 바 있다. 몇 사람의 밀입북 사건이 있었다 해서 7·7선언이 중단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세계가 탈 냉전과 신 대탕트 분위기로 서로의 벽을 허물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통일과 안보는 상호 배타적인 면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통일을 기하려면 상대적으로 긴장을 완화해야 하고 군비도 축소해야 하고 남북 서로간에 신뢰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안보를 강조하자면 상호 적대시하는 가운데 군비증강을 해 긴장도 고조되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차원이나 민간차원을 막론하고 이러한 상호 배타적 관계를 인정 안하거나 그러한 면에 신경을 쓰지 않은 면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7·7선언도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고, 흔히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 그렇든 그렇지 않든 안보에는 소홀한 사람처럼 부각되는 면이 있다.

통일과 안보 조화되어야

통일과 안보 두개의 길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북한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가 아닌가.

문호 톨스토이는 계획을 세움에 있어 궁극적인 목표와 당면한 목표 두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방안도 필요하

지만, 통일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남북한 분쟁해소라는 당면한 목표에도 노력을 집중시켜야 하겠다. 칼·도이치의 「안보공동체」 이론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지역은 통합이 되었다고 보는 이론이다. 남북한간의 관계가 지금처럼 대립의 관계가 아닌, 평화정착의 분위가 마련된다면 그것이 곧 통일로 가는 한 단계임과 동시에 일종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통일 아닌 남북의 관계개선을 강조하고 추진하는 것은 통일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즉, 분단의 불편이나 고통이 적어지면 통일에 대한 열망도 적어지고, 분단의 아픔이 클 때 통일의지는 커지고 그만큼 앞당겨진다는 논리다. 우리는 이러한 분단 고착화 논리나 신화에서 깨어나야 한다. 남북긴장 완화는 단기적으로 분단의 불편과 고통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일에 이바지하는 확실한 과정인 것이다.

남한에서의 민주화는 통일을 위해서라도 계속 추진되어야 하겠다. 남한의 민주화가 비록 북한을 의식한 전략은 아니지만, 북한으로부터의 합리적인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많다. 즉 북한의 민주화를 도출하지는 못할 지라도 최소한의 개방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남북긴장 완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미제국주의 앞잡이 군사독재」 운운하는 식으로 매도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북한은 남한에서의 민주화에 당황하고 초조해진 가운데 통일의 이유로 남한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되는 바, 우리는 슬기와 화해 정신으로 임하여, 통일의 이유가 정부와 국민,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상호대립을 유발하는 이유가 아니고 앞으로는 서로간의 화합을 산출해내는 이유로 발전시켜야 하겠다. 따라서 통일의 열망으로 밀

입북 등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관용이 바람직하다. 특히 7·7선 언 이후 정부가 잘못 리드한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전적으로 개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처벌해서는 안될 것이다.

피부에 닿는 남북교류정책이 중요

우리가 가장 시급히 추진할 일은 서신, 전화 그리고 이산가족을 위시한 사람들의 왕래이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통일방안과 조건들의 변천 추이를 일일이 기억할 길도 없다. 반면에 가시적이고 피부에 닿는 남북교류정책이 가장 큰 관심사인 것은 분명하다.

그동안 제시된 남북한 각각의 통일구상은 상당한 괴리를 노정하고 있다. 통일방안을 위시해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수정 비판 반대를 반복하는 「별난 형제」였다. 그러나 통일방안을 포함한 모든 정책이 최종적이고 절대적이라기 보다는 한반도의 조건변화와 시대적 요구와 분위기에 순응하는 방향에서 부단히 변화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남북한은 보다 유연하고 융통성을 지닌 자세로 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통일을 위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盲目的 통일론보다 民主化가 우선

月刊朝鮮「政治時評」'89.11. 安秉永 연세대 교수

「동구=공산주의 몰락」 발상은 냉전의식 발로

최근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는 우리들에게 이념과 체제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마련한다. 체제개혁에 가장 앞서고 있는 헝가리의 경우, 집권 사회주의 노동당(공산당)은 최근 당대회에서 40여년간 지속된 공산 일당 독재체제의 해체를 선언하고 서구식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변신을 천명했는가 하면, 이에 앞서 지난 달 폴란드에서는 자유노조가 주도하는 연립정부가 구성되어 폴란드 공산당은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심층적 의미는 무엇인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 주는가.

필자는 동구에서의 큰 변화를 「공산주의 체제의 역사적 몰락」이라는 일반적 명제로 환원시켜 설명할 생각이 없다. 그런 식의 선부론 설명 양식은

자칫 우리 의식 속에 과잉 내면화되어 있는 냉전의식의 조급한 발로일 뿐, 문제상황을 분석적으로 인식하는 데 별로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는 어디서 잉태되었으며, 기존 체제의 어떤 측면이 바뀌고, 어떤 측면이 그대로 지켜지는지 뭔가 하나 하나 짚어가며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동구, 특히 요즈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있는 몇몇 나라들, 즉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는 지리적으로 中歐에 속할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서구문화권에 속했거나 아니면 서구문화와 오랫동안 밀접한 교류를 지속해 온 나라들이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정신사적 유산은 비록 서구에서 잉태되었으나 아시아의 동양적 전제정치문화에 접목되어 그 본래의 휴머니즘적 면모를 크게 상실해 버린 소비에트 마르크시즘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따라서 1950년대 중반 이후 줄기차게 계속된 동구체제 변화운동의 뿌리에는 항상 이러한 문화적 격차 요인이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自力 공산화」에 성공한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다른 동구 여러 나라의 경우, 제 2 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진주한 소련군의 직·간접적인 무력 개입 아래 말하자면 원치 않는 공산화의 길을 걸은 나라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공산화와 더불어 이들 나라는 자유와 인권을 잃었고 아울러 자유선거, 복수정당제도, 의회정치 등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빼앗겼다. 프롤레타리아의 이름으로 등장한 공산당 일당체제는 얼마안가 관료독재체제로 전락, 민중 위에 군림했다. 이들 나라의 민중들이 자유라는 가치의 폐허 위에 힘겹게 성취한 알량한 평등이 실제 있어 전국민의 하향적 평준화임을 깨닫는 순간, 동구에서는 체제에 대한 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솟은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취약한 생산력은 끝내 민중의 복지수준 자체를 끌어내려 평등의 의미를 무산시켜 버린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체제 추구하는 동구권

얼마전 공산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있었던 한 여론 조사에서 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로 많은 이들이 스웨덴을 꼽았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이 나라는 자유와 복지수준에 있어서는 물론 평등의 정도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사회주의 국가보다 앞선다. 이 나라의 생산체계를 보면 분명 자본주의적이나, 분배체계를 보면 오히려 사회주의에 가깝다. 그런가 하면, 이들 나라의 기본적 정치과정을 보면, 분명 자유민주주의적이거나, 정권을 잡은 정당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 목표는 보다 사회주의적 더 정확히는 사회 민주주의적이다.

그런데 헝가리 등 체제개혁에 앞장 서고 있는 동구 여러 나라가 은연중에 지향하는 체제 모형이 다름 아닌 「북구형 선진 복지사회」에 무척 가깝다. 동구 개혁론자들은 우선 정치적 민주주의, 즉 자유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의 복원을 강력히 원한다. 그런가 하면, 조심스러우나 이들 모든 나라가 경제개혁을 서두르고 있고 그 내용인즉 상품, 자본 및 노동부문에 걸쳐 대폭적으로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증권 및 주식제도와 은행의 서방식 개편, EC와의 經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도 점차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도입을 통해 생산력을 증강시켜 대중들의 복지수준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허구적 평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을 자극하는 것은 이들 나라가 동서의 양 거인으로부터 벗어나서 장기적으로 중립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헝가리 지도자들은 두 강대국의 용인 아래 알타체제의 산물인 동서 분할을 청산하고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고 있다.

「하나의 유럽」상징, 統獨 준비하는 서독

이렇듯 동구 여러나라에서 개혁 도미노가 예고되는 가운데 동독의 경우는 유별난 데가 있다. 동독은 동구 여러나라 중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 크게 성공적인 나라다. 1인당 GNP 1만 달러의 높은 생활수준이 바로 그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서독과의 경제적 수준 차이는 아직도 까마득하며, 더욱이 정치적 억압과 자유 및 인권유린에서 오는 체제에 대한 욕구불만은 이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동독 집권층의 경제적 현실대응은 무엇보다 이 나라의 분단상황에서 비롯한다 하겠다. 동구 여러나라가 은연중에 추구하고 있는 「북구형」 개혁 노선은 실제로 「서독형」에 매우 가깝다. 따라서 동독이 헝가리식의 체제 개혁을 시도하다가는 자칫 스스로가 서독체제의 우월성을 우변적으로 대변하는 입장이 될 터이므로 매우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소폭적 개혁으로 우선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주위 및 국내상황이 주는 압력이 너무 거세다. 정말 진퇴유곡에 빠진 셈이다.

그렇다면 서독의 대응은 어떤가. 서독은 1970년대 초 이른바 「동방 정책」을 주도하면서 당장의 통일보다 양독간의 평화와 분단에서 오는 고통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접근은 양독간의 평화공존과 교류확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 때문에 우리의 남북관계에서와 같은 첨예한 대결상황은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서독이 통일에의 열망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단기적으로 통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양독간의 교류증진을 통하여 실질적인 통일여건 조성에 노력해 온 셈이다. 오늘 서독은 아마도 내심 통일의 새로운 단서를 포착하려고 노력하는 인상이다.

동구의 체제개혁운동이 보다 확산되고 내실화되어 언젠가 「하나의 유럽」이 성취되는 날, 새로 형성되는 그 큰 울타리 안에서 동서독간의 재통

일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구상이 그것이다. 예컨대 동구 체제개혁운동의 앞장을 서고 있는 헝가리와 폴란드를 비롯해서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구 여러나라들이 소련의 용인 아래 체제를 크게 개혁하고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핀란드화」와 「하나의 유럽」으로 계속 뻗어나갈 때, 동독만이 고도(孤島)로 남아 있을 수 없을터이므로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독일 재통일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미소의 양 거인이 보증하는 「하나의 유럽」의 탄생이 가능하다면 동서독의 통일이 왜 불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서독이 독일 통일의 과제를 먼 훗날로 미루고, 그냥 안일하게 체제관리에 임해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독은 자신의 체제를 인류의 꿈이 가장 잘 실현되는 체제로 만들기 위하여 그동안 경이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서독은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자유 평등 복지를 구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조직 내에서 노사가 동수로 전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른바 「공동 의사 결정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유례없는 산업평화를 구축하는 등 이른바 참여민주주의의 典範을 선보이고 있는 나라이다. 서독은 이처럼 민주화·인간화·복지화의 성공을 통하여 동구 여러나라의 선망의 표적이 되었고, 국제사회 속에서 동독과는 비교가 안되는 존경을 받아 왔다. 그런 의미에서 서독은 통일 이후의 사회가 갖춰야 할 통일독일의 원형을 이미 크게 현실화시켰다고 말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 때문에 동독은 일찌감치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체제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독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동독은 이미 대안적 체제모형이 아니다.

북한식 자주성 교수는 국제적 낙후요인

얼마전 세계 성체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북한에도 동구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교황의 기원은 아마도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일 것이다.

북한은 변화하는가. 아마도 이 물음에 대하여 아무도 한마디 바른 대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동구의 경우, 민중적 차원의 자유화와 체제개혁운동의 역사가 이미 4반세기를 넘어가고 집권층 스스로의 자기쇄신 노력도 실로 우리에게는 큰 놀라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비할 때, 북한에서는 눈에 드러나는 구조적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게 사실이다. 같은 분단국가인 동독의 경우, 아직도 경직된 공산 독재체제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복지수준이나 체제개방화의 정도에 있어서 북한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다.

요즘 「북한을 바로 알자」는 구호 아래 북한을 실제 이상으로 의도적으로 미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그렇다고 북한의 실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자유와 인권의 억압은 물론이거니와 경제발전 및 개인 복지수준이 크게 뒤져 평등이라는 구호가 허구화되고 있음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러나 북한내에서 민중적 차원의 변혁운동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남한의 많은 이들에게 때로는 「적」으로, 때로는 「경쟁상대」로, 또 요즘에는 가끔 「동반자」로 등장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남한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반응을 하기가 일쑤다. 그러나 대체로 구세대들은 북한을 일응 안보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반해 급진 좌경세력의 일부에서는 북한을 아예 남한체제에 대한 대체적 체제모형으로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전자의 경우도 편협한 안목임에는 틀림없으나, 후자의 경우 한마디로 위험할 뿐 더러 성숙하지 못한 생각임에 틀림없다. 북한체제에 대해 이

들이 높이 평가하는 측면은 대체로 주체성과 평등성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주체성은 다른 나라와의 개방적 교류와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같은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도 한마디로 「폐쇄적」으로 치부되는 북한식 주체성은 체제의 발전 잠재력이라기 보다 오히려 낙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뿐더러 복지라는 내실을 갖추지 못한 허구적 평등화는 체제를 정체화시키고 비인간화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동구의 최근세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통일은 참평화 위한 수단적 가치

오랜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른바 국책 과목이라는 관제적 교양 교육체계 속에서 타문화권 및 타시대에 대한 깊이있는 관심과 통찰력을 키우지 못한 감이 있다. 따라서 최근의 소련, 중국 그리고 무엇보다 동구에서의 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수용하지 못하는게 사실인 듯하다. 열린 사고체계 속에서 조감할 때 북한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체제모형이 아니다. 오히려 개혁되고 극복되어야 할 체제모형일 뿐이다. 북한동포와 화해와 일치를 모색하는 것과 북한체제를 분별없이 미화, 수용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어두운 측면들, 특히 갖가지 반민주적·반자주적 요소와 경제적 불평등은 분단이라는 원죄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따라서 통일이 성취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곧 풀린다는 사고 또한 매우 미성숙한 발상임을 알아야 한다. 물론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실로 감내하기 어려운 비극과 고통을 안겨 준 것이 사실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의 업보를 많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분단이 우리 사회의 모든 적폐를 홀로 짐질 수 없을 뿐더러,

통일이 된다고 하루 아침에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북한 신드롬 원인은 우리 체제 속에 있어

독일의 경우 전후 패전국으로 우리보다 더 혹독한 상황 속에서 분단되었으나 서독은 이제 자유, 평등, 복지를 함께 누리며 최상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성취한 새로운 삶의 공동체로 거듭났다. 분단국이라고 해서 숙명적으로 저주받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논리는 자칫 체제의 자기쇄신 노력을 零化시킬 뿐더러 통일의 정당화 논리로도 빈약하다. 분단 원죄론(分斷原罪論)은 흔히 통일 지상주의와 접목된다. 모든 통일운동은 참평화 운동이며, 통일을 앞당기는 모든 노력은 신성하다는 입장은 보다 성숙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 자체의 중요성 못지않게 통일 후의 상황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통일후의 한국 역시 부족한 사람들이 만들어내야할 인간의 창조물이다. 따라서 그것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신비의 공동체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 그것은 오늘보다 더 많은 갈등과 불협화음으로 뭉쳐진, 현재보다 더 열악한 정치공동체일 수 있다. 통일은 목적적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식 통일보다는 서독의 분단상황을 우리가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 내에 북한을 남한체제의 대체모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아니 아마도 그 수가 계속 늘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은 실로 충격적이다. 그런가 하면 상식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통일지상주의가 정서적으로 이땅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사실도 딱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원인을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회 속에서 일고 있는 엉뚱한 북한 신드롬, 통일 지상주의 그리고 변지수도 확실하지 않은 각종의 체제변혁운동을 야기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우리 체제 안에 있는 것이다, 북한의 실상을 바르게 전달하거나, 동구에서의 사회주의의 실패를 정확하게 인식시킨다고 이러한 변혁운동이 쉽게 약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 체제에 대한 좌절과 회의는 결국 다른 대안을 자극하며, 비현실주의적 처방에 매달리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체제 쇄신만이 남북한관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의 통일문제 인식을 바른 궤도 위에 올려 놓는 최상의 방책인 것이다, 그것 없이는 아무리 그럴듯한 통일방안도 어느 누구의 관심을 끌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동구의 변화를 바라보는 서독과 한국의 눈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제 2부 **社 說**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明暗

國民日報 '89.9.11

南와 北이 갈라져 살아서는 안된다. 하루빨리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 민족공동체 구성의 기초를 다지고 겨레가 분단으로 받는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가 되어 민족이 공존 공영의 단일 국가를 건설하고, 한민족 모두가 고르게 자유와 복지 민주참여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

11일 盧泰愚 대통령이 국회 특별연설에서 밝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러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의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盧대통령이 제시한 새 통일방안은 무엇보다도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중시하여 「중간과정」을 명시한데 특징이 있다.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 먼저 남북대화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연합」을 구성한다는 것이 9·11선언의 골간으로 되어있다. 남북연합은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

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를 두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통일헌법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국가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통일국가의 미래상 못지않게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체계를 기본으로 한 통일국가 수립의 절차와 방법을 중시한 점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통일방안은 7·7공동성명의 정신을 수용하고 盧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밝힌 자주 평화 민주의 통일 3원칙을 재확인하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기에 따라서는 7·7선언의 수준에서 한 단계 후퇴한 면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 통일방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통일의 주체, 실천의지의 가시화 그리고 실현 가능성면에서 종래의 통일방안보다 크게 돋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이러한 통일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방안을 북한이 겸허하게 받아 들일 때 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부터 개방으로 유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느냐에 새 통일방안의 성패가 걸려 있음은 자명한 상식이다. 적대감을 해소하는데 성의를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그동안의 통일논의에서 최종 국가의 형태 하나만 놓고 보아도 북한의 고려연방제나 남한의 국가연합 주장이 모두 1민족 2체제 원칙에서 크게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남북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이념이나 체도의 차이보다는 분단이래 누적되어온 적대감을 해소하지 못한데 있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 물론 새 통일방안은 국회 공청회 등 각계의 의

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정부의 對北제의 및 통일방안과는 다르다. 그러나 공청회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을 둘러싸고 각계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통일의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통일의 이상은 하나인데도 그 방법은 이념과 사상에 따라 천태만상이 다. 우리의 통일방안을 남반부 해방통일론과 혁명론에 매달려 있는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이번 통일방안의 성패는 먼저 우리 내부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이루느냐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

「통일민주공화국」 방안

東亞日報 '89.9.11

우리 사회의 다양한 통일논의를 수렴해 온 정부는 통일 원칙으로서 「7·4 남북공동성명」의 南北韓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주 평화 민주주의 3원칙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민족통일과 관련한 대통령의 국회 특별연설 형식을 통해 밝힌 정부의 통일방안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개의 체제를 영속시키는 「연방」형태가 아니라 단일국가인 「통일민주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은 분단 상황을 제거하여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가 다시 건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최종 형태가 어떠한 이유로든 분단의 찌꺼기를 안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세계사의 흐름이 증명하고 있듯이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과 행

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한 정부의 새 통일방안은 그래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민주국가의 이상이 참여와 기회균등,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과 대변이 보장될 수 있는 공화제를 통해서 최대로 실천될 수 있음을 인식할 때 「통일민주공화국」이 적어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이같은 원칙을 담고 있는 정부의 「통일민주공화국」 건설 통일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함께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총선거 실시」를 제의하고 있는 정부의 통일방안은 이 원칙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盧泰愚 대통령의 지적처럼 분단의 장벽은 두껍고 통일의 길은 험난하다. 우리의 통일방안 확정은 南北韓 통일협상 출발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그래서 南北韓의 통일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먼저 두가지의 전제 조건이 성립돼야 한다. 그것은 南北韓 존재에 관한 상호 인정이며 南北韓 두 존재의 잠정적인 협상체제 수립이다. 잠정적인 협상체제가 연방체제든 연합체제든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것은 통일국가로 가는 준비기간적인 통일체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 각료회의와 南北평의회의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통일논의는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 공청회같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고 이같은 민주적 절차의 반영에 노력했다는 정부의 통일방안이 드디어 2년만에 햇빛을 보았다. 다양한 의견의 존재를 존중하고 있는 우리의 체제 아래서 100%의 완전 합의는 있을 수 없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통일방안이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국회는 적어도 「통일민주공화국」 같은 대원칙을 결의안 통과 형식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그것은 자칫 낭

비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통일논의가 이제는 정치권 안에서라도 소화됐으면 하는 국민적인 여망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이견과 갈등을 하나의 통일의지로 용해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 용광로」 역할과 북한 사회의 先민주화와 개방화를 요구한 盧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주목한다. 이 두가지 조건이야말로 南北韓의 진정한 통일노력을 실증시킬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기 때문이다.

새 統一방안의 現實性

京鄉新聞 '89. 9. 12

南北이 감상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면 統一은 결코 어려운 문제일 수 없다. 같은 핏줄, 같은 언어, 같은 문화의 同族끼리 합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일이 至難한 까닭은 相異한 체제, 異質的 이데올로기간의 화해와 融合이 쉬운일 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수없는 통일방안과 제의가 있어 왔지만 이렇다할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남북한 모두 체제유지에만 급급했지, 진정한 민족 再結合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성의와 노력은 보여주지 못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선 提議와 逆提議, 默殺과 비난의 惡循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분단 40여년간 남북간의 누적된 불신과 갈등을 고려할 때 통일의 중간과정 없이 막바로 통일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며

공허한 名分論에 지나지 않는다. 또 통일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려면 먼저 남북 쌍방이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도 평범한 상식에 속한다.

盧泰愚 대통령이 천명한 새 統一方案은 바로 이같은 판단에 기초한 통일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통일 논의를 나름대로 여과해서 수렴했다고 할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명명한 것도 통일 민주공화국 건설에 이르는 중간단계로서의 여러 과정이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한민족공동체 실현에 주안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새 통일방안은 특히 통일국가 실현의 중간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남북 쌍방이 합의하는 憲章에 따라 남북연합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 남북연합의 최고 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 쌍방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각각 설치하자는 것도 주목할만한 특징이다.

결국 이 모든 기구를 살펴보면 그 하나 하나가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중시한 점을 알 수 있고 통일조국의 정치 이념이나 국호·국가형태,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 통일정부와 국회의 구성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도 민족구성원 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된 통일헌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있어 북한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그토록 새 통일방안의 입안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히 수렴했음에도 명실상부한 「국민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논평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문제만큼 중요한 국가정책이 국내에서조차 통일된 의견을 규합하지 못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하여 어떻게 북한과 같은 이질집단과 궁극적인 통일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남북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내부의 통일논의부터 통일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 통일과업에는 相對의 변화도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가 북한 사회의 민주화와 개방화를 촉구하는 까닭도 그런 연유에서다. 새 통일방안은 국민적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를 허심탄회한 입장에서 수용 검토하겠다는 북한측의 자세 전환이 보다 필요하다.

統一로 가는 한민족공동체

서울신문 '89.9.12

韓半島의 통일 문제는 6천만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기에 이에 관한 학자나 전문가가 따로 없다. 모든 국민이 一家見을 갖고 한 마디씩 할 수 있다. 통일 문제는 이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측면과 동시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것이 우리들 통일논의의 어려움이다.

통일의 주역은 민족 구성원 전체이다. 따라서 통일국가는 결국 민족 전체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통일방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 실현을 위한 추진력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오랜 논의와 국민적 참여를 거쳐 이번에 발표된 새 통일방안은 국민 모두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집념을 한데 모은 현실적인 방안이며 百花齊放의 논의단계를 거친 結實이라 할 수 있다.

自由·民主·平和統一의 論理

지난 8월 15일 盧泰愚 대통령은 통일로 가는 원칙을 확실하게 제시한 바 있다. 자유·민주·평화 그리고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다. 그것은 72년의 7·4 공동성명과 같은 것이지만 몇가지 중요한 현실적 접근을 하고 있다. 새 통일방안은 이를 토대로한 정책의 실천 방안이다. 특히 분단 현실에 대한 인정과 과도적 통일체제로서의 南北聯合 제의는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남북연합은 그 자체가 통일된 국가의 최종 형태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남과 북이 상호 협력과 共存共榮의 관계를 도모하면서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단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사실 남북한관계의 역사나 현실을 볼 때 즉각적인 또는 몇년 이내의 통일 실현은 기대할 수 없다.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오늘날에도 南北韓관계는 서로간의 不信과 증오의 반복으로 가득차 있다. 오늘날 강대국들이 軍縮과 공존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긴장완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韓半島의 狀況여건은 그 물결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통일은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 입각한 이 점진주의를 두고 北韓은 통일 열망이 부족한 자세라느니 통일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느니 하고 비난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진주의만이 체제와 이념이 서로 다른 南北韓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원칙이라고 확신한다.

統一과 反統一의 요소

南北의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의 통일을 달성하려는 민족적 과제, 이 염원과 과제는 남북한의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부정될 수 없다.

그러나 北측은 다르다. 그쪽의 金日成주의자들은 아직도 南北을 베트남 방식으로 통일시킬 수 있다는 妄想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건 그렇고 남쪽

의 일부 현상은 어떠한가. 무조건 즉각 통일을 부르짖고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金日成 주석」을 만나야겠다는 환상에 젖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두가지 중대한 誤判이 바로 오늘날 反統一의 요소이다.

오랜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통일 문제는 그런 망상이나 환상은 물론이거니와 뜨거운 열정만을 갖고 논의하고 주장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 그 뜨거운 염원이나 열정에 비해 아직도 통일의 전망은 밝지 않다. 통일염원은 감정이요 理想이지만 현실적 통일은 냉엄한 理性이요 엄격한 논리전개의 과정이다. 우리들의 통일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 뜨거운 염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차가운 이성만을 내세워서도 안된다.

아울러 우리들의 통일접근에 있어 상대가 없는 통일논의는 무의미하고 반대편으로부터의 상응한 노력이나 반향이 없는 통일방안은 실현성이 없다. 새 통일방안은 이 두가지 측면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금까지 北韓측이 주장해온 여러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그 일부를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合意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이 방안 토대로 대화할 때다

戰爭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南北韓을 통틀어 우리들의 평화통일논의의 첫 단계는 두말할 것 없이 대화이다. 어떤 형태의 통일논의나 방안도 이 대화의 전개를 根幹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오늘의 남북관계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과거의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北韓은 진정한 의미에서 남북대화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쪽의 진지하고 성실한 對北韓 자세와 노력이 지금까지 그다지 돋보이지 못한 것도 대화에 임하는 北韓의 자세에 진실성과 성의가 담겨있지 않았던 탓이다. 지금 南北韓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큰 장벽은 신뢰감의 상실이다. 상호간

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떤 접촉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쪽의 몇몇 사람들의 密入北사건 이전 몇 갈래로 추진되던 남북회담이 문제해결이나 접근은 커녕 서로 깊은 不信만 노출시킨 것도 어느 한쪽의 성실성과 진실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새 통일방안에 담겨있는 민족공동체헌장 제정이나 평화구역 또는 통일평화시 건설 등은 남북간 상호 존중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세계는 체제와 이념을 넘어 개방과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 北韓은 안팎으로 변하는 세상을 똑바로 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방과 變化를 꾀해야 한다. 南韓은 「식민지」이기 때문에 꼭 「해방」시켜야겠다는 논리에 집착하는 한 우리의 평화나 통일문제는 절대로 풀릴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진심으로 대화와 공존 그리고 교류와 통일접근을 바란다. 이제 우리들의 이 통일방안으로 다시 대화에 나서야할 때이다.

轉換시대의 새 統一方案

世界日報 '89.9.12

盧泰愚 대통령이 11일 국회에서 발표한 韓民族共同體 통일방안은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사와 통일을 위한 객관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날의 그것보다 進一步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새 통일방안은 또한 共產圈 내부의 격동과 韓半島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등 世界질서의 역사적 大轉換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당국은 새 통일방안을 국민적 합의 아래 추진하기 위해 國內외의 여건을 감안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盧대통령의 새 統一方案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82년에 천명된 「민족 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 미흡했던 統一까지의 中間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즉 南北대화가 南北 정상회담으로까지 발전하여 거기서

「민족공동체」구상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統一까지의 중간과정으로 과도적인 「南北연합」체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南北韓은 44년간이나 분단돼온 데다가 戰爭까지 겪었기 때문에 쌍방 체제간의 異質性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이질성을 극복하고 同質性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統一까지의 접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國會 통일문제 공청회에서도 4黨대표들은 統一構圖에는 다소 견해를 달리했지만 統一이 몇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데는 뜻을 같이 했다.

새 統一方案은 「南北연합」의 구성에 있어서 최고 결정기구인 頂上회의와 南北각료회의, 南北평의회 및 共同사무처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 구성에 있어서 政府는 南北韓에 두개의 체제가 존재함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南北韓을 대등한 지위에 올려놓았다. 즉 각료회의를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으로, 평의회를 각각 50명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대화는 물론 그동안 北측이 집요하게 요구해 오던 政治·軍事문제도 각료회의에서 동시에 논의토록하자고 한 것은 北측 주장을 크게 수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政府가 「南北연합」과 「統一국가」의 형태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앞으로의 국가형태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막고 北韓의 비판에 대응하는데 유효할 것 같다. 즉, 이 「연합」 하에서 南北은 외교·군사권 등을 보유하는 主權 국가 형태로 남게되지만 수 천년동안 단일국가를 유지해온 民族의 전통으로 보아 「1민족 2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南北韓 최고 책임자가 「民族공동체현장」을 선언만 한다면 南北은 「연합」단계에서 두개의 단위로 유엔에 가입하더라도 統一단계에서는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기는 南韓체제의 변화와 北韓체제의 영속성을 전제로 한 非同盟·中立의 「高麗聯邦」구상이야말로 합정이 갈린 통일방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統一문제를 南北韓의 관계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世界史의 변화의 과정에서 보아야 한다. 社會主義는 이제 政治·經濟의 이념으로서는 사멸해가는 과정에 있다. 社會主義의 몰락으로 冷戰시대는 변질되어 지구상에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 大轉換의 시대에 오직 北韓만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北韓주민들은 차차 그들이 세계에서 고립돼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北韓당국은 통제를 더욱 강화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압력에 못이겨 주민들의 不服從이 확산된다면 北韓 천지에는 큰 비극이 닥쳐올 것이다.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 빨리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 돌파구는 바로 韓國과의 대화를 통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민족 공동체」

朝鮮日報 '89. 9. 12

추석을 사흘 앞둔 11일, 盧泰愚 대통령은 한민족 공동체라는 이름의 선물을 국민 앞에 내놓았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국민은 어리둥절해 할 것이다. 72년의 7·4공동성명이래 하고 많은 통일방안 또는 통일에 관한 선언들을 들어 왔기 때문이다.

여기 일일이 나열할 것도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자주 평화 민족의 대단결을 다짐한 72년의 남북 7·4 공동성명이 발표됐을 때 기쁨과 충격으로 어쩔줄을 몰라 했다. 그러나 「민족의 대단결」을 다짐한 다른 한쪽이 그 말을 「외세배격과 주한미군 철수」라는 의미로 逆宣傳하면서 휴전선 지하에 땅굴까지 파는 背信을 하는 바람에 우리의 기쁨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쪽, 즉 남쪽에서는 73년 6월에 공산세계

에 대해 폐쇄했던 가슴과 문을 활짝여는 6·23선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저쪽은 오히려 두달 후에 문을 닫아 버렸다. 북한측은 73년 8월 金大中씨 납치사건을 이유로 남북회담의 재개를 무기 연기했던 것이다.

그후 남북한 쌍방에 정치적인 변화 또는 체제상의 변혁도 많았다. 그런 가운데도 남쪽은 1982년에「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했고 이어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인 20개 시범 사업방안을 제시했다. 요컨대 가능한 일부부터 시작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실현을 위한 사회 경제 문화적 차원의 공동사업을 제안했던 것이다.

북한측은 그래도 막무가내였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공산주의하의 「하나의 조선」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그 방법과 과정으로서는 오직 주한미군 철수만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들 마음대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治下의 통일조선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어적인 팀스피리트훈련도 해서는 안되고 그들의 기습남침을 抑止하는 주한미군도 하루속히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西獨이 24만 5천여명의 미군을 두고도 東獨과 함께 兩獨基本조약을 맺고 평화리에 人的, 物的교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작년의 7·7선언은 바로 그런 類型의 평화적인 남북 교류를 想定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을 그 본래의 뜻과는 거꾸로 받아들인 남한의 일부 인사들이 北쪽에서 각개 격파되는 식으로 이용만 당하고 말았다.

정부는 그동안 수 십차례의 여론조사와 4백여건의 학자논문, 2백여회의 공개토론을 통해 통일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를 모아서 분석해 왔다고 한다. 盧대통령이 작년 10월 4일 국회에서 언약했던 통일방안도 내놓을 겸 11일의 정기국회에서 추석 선물처럼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그간의 그런 勞苦의 결정이라고 할만도 하다. 그만큼 성의와

노력이 엿보이기도 한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최고 결정기구로 하여 남북의 각료회의와 국회의
원들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고 공동사무처까지 두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의 어느 통일방안보다도 성의있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결과임을
짐작케 한다. 정상회담에서 「민족공동체헌장」이 채택되고 남북연합체가
구성된 다음 통일헌법이 채택되어 궁극적으로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통일 민주공화국이 탄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만 이번에도 국회에서의
공청회 직후에 너무나도 성급히 내놓은 듯한 인상은 지울 수 없다. 좀 더 넓
고 깊은 국민적 합의와 북한의 대체적 동의라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
을까.

새 「統一方案」의 前提

中央日報 '89. 9. 12

盧泰愚 대통령이 11일 國會 특별연설에서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정부가 그동안 무성했던 統一論議를 일단 정리, 통일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의 기본방향과 윤곽을 公示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統一에 이르는 中間過程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統一方案과 다르고 통일국가의 형태를 單一民主共和國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聯邦制 통일론과도 구별된다.

이번 統一方案은 자주·평화·민주의 3대원칙아래 ① 南北對話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② 南北聯合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며 ③ 최종적으로 統一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는 3단계 통일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특징은 중간단계인 南北聯合에 있다. 이것은 과도적인 統一 전단계 體制로서 고안된 개념이다.

이 단계에는 최고 결정기구로 頂上會議가 있고, 그 밑에 각료회의와 평의회·공동사무처, 그리고 서울과 平壤에 상주 연락대표를 두는 것이 특징으로 돼있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國家聯合 상태로 볼 수 있다. 「국가연합」이란 독립된 복수의 主權國家가 「조약」에 의해 결합하는 형태다. 이 단계에서 주민들은 각기 自國의 「國籍」을 갖는다. 이것은 「헌법」에 의해 결합되고 원래 국가의 國籍을 포기하고 새로운 국적을 갖는 聯邦國家와는 구별된다.

정부가 「국가연합」이란 명칭을 피하고 굳이 南北聯合이라고 한 것은 분단 고착화라는 오해의 소지를 예방키 위한 고민의 產物이라는 인상을 준다.

統一方案이란 분단상태를 종결시켜 국가를 統一하기 위한 절차와 방향에 대한 政策구상이다. 따라서 北의 호응 내지 同意 없이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어느 한 쪽의 統一方案대로 統一이 이뤄지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統一方案의 1次的 의미는 統一에 대한 국민의 意思와 노력을 결집시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나가기 위한 求心點을 도출하는데 있다.

정부는 당장의 과제인 對北 접촉 再開와 아울러 이 統一方案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사를 수렴키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그것은 총 2백 40회에 달하는 간담회나 세미나, 1만 7천명에 대한 설문조사, 4백 26건의 논문 참조, 그리고 최근의 國會공청회 형태로 이루어졌다.

앞으로 이 통일방안을 국민 대표기구인 國會同意的 형식으로 公式化시키고 그 다음이 이 방안을 토대로 北측의 통일안과 절충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은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우선 최근 公安局을 몰고 온 北의 對南戰略으로 야기된 깊은 不信의 골을 메우는 작업이 시급하다.

9월말로 예정된 각종 南北접촉에서 政府는 지금까지 北이 취해온 對南 전략이 南北 모두의 統一노력을 뒷걸음질치게 만들었으며 北이 그와같은 二重性 접근을 계속한다면, 6천만 국민들의 염원인 통일에의 길은 멀어만 가게 된다는 점을 의심의 여지없이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政府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합의가 北韓당국자들을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담보임을 다시 확인하는 바다.

統一에 이르는 段階들

한국일보 '89. 9. 12

통일이러는 민족의 과업을 놓고, 우리는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소진했고 형언 못할 정력을 쏟아부었다. 남과 북은 하나이어야 한다는 민족적 일체감은 치열하게 불꽃이 솟아오름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현실은 여전히 가시밭길 처럼 험난하기만 하다.

통일을 가로 막는 최대의 걸림돌은 이념과 체제의 차이라는 양극성이다. 이로 인해 불신의 벽은 높아만 가고 이해의 숨통은 좀체 열리지 않는다.

문은 두드리면 열린다고 한다.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세차게 닫힌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새로 마련, 盧泰愚 대통령이 정기국회 개회 연설을 통해 발표했다.

새로운 통일방안은 구성과정과 내용에서 종래와는 크게 다름이 평가받을 만 하다. 통일논의에 불길이 댕겨지고 격화되면서 우리는 심한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다. 개방사회라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새 통일방안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합의 바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할만 하다.

실질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통일헌법 제정이전의 구체적인 과도기적 중간과정을 설정한 것이다. 즉 남북 정상회담에서 민족 공동체헌장을 채택하고 남북연합 형식으로 각료회의와 평의회를 두어 최종적인 통일로 향해 단계적으로 접근하지는 제의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과 신뢰구축·남북연합·단일국가의 3단계의 제시는 지금까지 환상적으로 생각되던 통일이란 문제에 보다 강한 현실감을 부여했다는 의미에서 주목할만하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으로 7·7선언 이후의 통일논의와 감상적 행동화의 혼란은 일단 정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론 이 방안이 최선의 완결편이라는 성급한 규정은 피하는게 옳을 줄 안다. 왜냐하면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는 군사문제에 언급이 없다거나 하는 미흡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여론을 오랫동안 여과했다고 하나 아직은 국회 결의 등의 뒷받침이 없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국회가 이 정부안에 대해 결집된 의견을 표현한다면 그간의 혼란된 우리 사회의 통일논의의 정돈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통일방안이나 원칙이 만들어졌다고 하여도, 주요한 것은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통일논의는 상대가 있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면서 남에대해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우리측은 그런 조건의 제시는 없으나 북의 민주화와 개방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盧대통령이 그의 연설에서 이점을 되풀이 강조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통일은 기적처럼 하루 아침에 성취되지 않는다. 꾸준한 대화를 통해 접근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통일의 중간과정은 그래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래야 통일논의가 현실감을 갖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과도기의 창출을 위해 끈질긴 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유도하는 적극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도 이제 공작차원의 통일논의는 철폐함이 마땅하다는 말이 된다. 결과 속이 다른 접근자세는 통일달성에 방해가 되지, 도움은 못준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민주화 통일임을 확실하게 밝혔다. 그렇다면 통일의 기반을 빠른 민주화로 구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야 국민이 따르고 믿어준다. 그 의지가 확고하게 보일 때, 통일세력이니 반통일세력이니 하는 부질없고 낭비적인 논쟁도 멈출 것이다. 통일의 그날까지, 온 겨레가 머리를 더 짜내고 땀흘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새 「통일방안」을 국민적 토론에 부치자

한겨레신문 '89. 9. 13

노태우 대통령이 11일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몇 가지 새로운 제안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을 남기고 있다. 그 까닭은 우선 이 방안이 통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 통일방안이 국민대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말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방안이 제도권이나 기득권층의 의견을 반영했는지는 몰라도 국민대중과 재야의 견해를 토론을 통해 수렴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노대통령의 통일방안은 통일논의와 운동에 앞장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탄압받고 투옥되어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통일논의」와 「통일방안」 사이의 대립과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이런 「모순」은 정부의 새 통일방안이 진정으로 통일의지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당연히 연결된다.

노대통령의 새로운 통일방안은 통일의지와 실현 가능성의 양면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던 82년의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과 기본적으로 골격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일원칙에서 자주(민족자결)·평화·민주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데서부터 그렇다. 여기에서 「7·4 공동성명」의 3원칙 가운데 「민족 대단결」의 원칙은 민주로 바뀌어 있다. 「민주」의 원칙에 반대할 사람이야 없겠지만, 민주주의 내용이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흡수·통합하는 것을 지향한다면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7·4 공동성명」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통일에 이르는 중간단계를 중시함으로써 82년의 통일방안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 「남북연합」이 특수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지만 그것은 결국 「국가연합」을 의미하며, 따라서 새 통일방안이 과도적으로 1민족 2국가 2체제를 설정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과도적 단계는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의 수립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총선」 방식은 냉전시대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와 본질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그 실현성이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끝내 남는 것은 1민족 2국가 2체제의 지속밖에 없을 것이며 그것은 분단의 고착에 다름아니다.

정상회담을 열기 전에 남북 교류와 신뢰 구축 등 통일의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방안을 소홀히 다룬 채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각료회의를 설정한 것도 순서가 거꾸로 된 것으로서, 통일운동에서 국민대중을 배제하고 정부가 통일논의를 독점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화공존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군사문제가 지엽적인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 통일

방안의 성격을 드러내 준다.

분단 45년 동안 남북한 쌍방은 2백여차례 이상에 걸쳐 수많은 제안과 역 제안을 주고받았으나 어느 것도 현실적 노력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세우고 거듭되는 대화와 교류 속에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일이다. 그러지 않는 한 어떤 화려한 통일방안도 공허한 목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노대통령의 이번 통일방안부터가 국민적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